

4. Landmines as a future assignment for disarmament and peace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avoid the thought of using old-fashioned weapons during war and gain knowledge and wisdom of the changing military and social situation. First, they must learn about the removal and prohibition of the landmines through peace 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of the people. The Four Party Talk is basically the main key in the issue of prohibiting and abolishing landmines.

Next,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prepare for international pact and international movement and should verify its position and plans publicly. The International society looks at the Korean 지뢰 issues not just as a military issue but connects them with peace unification. The Korean government has already made a promise to ratify the amended protocol 2 of CCW established in Geneva disarmament led by the Americans, within this year. The American government has decided to join the Ottawa Anti-Landmines Agreement by the year 2006 and provide solutions for the victims. The Korean government has only announced that they are in process of regulating to discharge the CCW but has not stated the information nor the plan. The fact that the people are not being notified of the issues cause a serious problem.

Lastly, that the cost used for the removal and prohibition of landmines is the only a part of the peace unification expense and this needs to be noted. If the government decides to join the CCW this year, we must immediately remove landmines and stored landmines and start adding detection equipment. Also the money needed for civilian victims and others can become a part of peace unification expense.

It is not logical that the Korean government asks the International society to support peace unification and reconciliation of the people but will not allude to the armament reduction problem. We must look to see if the international society considers the landmines problem in the Korean Peninsula as a unification problem. ■

아시아와 유럽의 무기이전과 군사비

이 철 기
/ 동국대 교수

1. 머리말

전세계적인 냉전체제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한반도는 여전히 냉전의 마지막 유산으로 남아 있다. 남북한은 계속해서 적대관계와 군사적 긴장상태를 유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군비경쟁을 지속하고 있다. 한편 탈냉전시대 동북아의 정치 및 안보환경 역시 여전히 변화와 불확실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는 것은 우리의 당면한 과제와 임무가 아닐 수 없다. 또한 그것은 동북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데 필수적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고 군축을 달성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평화와 안정을 달성하는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앞에 가로 놓여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장애물은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군축을 방해하고 있는 무기이전이다.

「미국 군비통제 및 군축처」(ACDA)에 의하면, 무기이전을 “양도·신용·물물교환·현금구매 등을 통하여 보통 ‘재래식’으로 불리는 군사장비 - 전쟁무기와 그 부품, 탄약, 지원장비, 그리고 기타 군사용도의 물품을 포함하여 - 의 수출입과 같은 국제적 이전”¹⁾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논문은 아시아와 유럽에서(또는 아시아와 유럽간에) 무기이전의 경향과 특징을 살펴보고,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과 관련해 무기이전이 지니고 있는 함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아시아와 한반도에서 무기이전을 통제하고 그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이 논문의 목적 가운데 하나이다.

2. 아시아와 유럽의 무기이전의 경향과 특징

1)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1996*(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7), p.189.

1987년에서 1993년까지 무기이전이 감소한 이후, 1994년부터 무기이전이 증가하고 있는 명확한 경향이 목격된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추산에 따르면, 1997년의 경우, 전세계인 주요 재래식무기의 이전금액은 1996년 보다 12% 증가했다. 즉, 1996년의 무기이전 금액이 \$22,542 이었던 데 비해, 1997년의 무기이전 금액은 1990년 고정가격을 기준으로 \$25,156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표-1 >에서 보듯이, 1997년의 경우 아시아는 지역적으로 가장 큰 무기 수입시장으로 부상했으며, 유럽은 가장 큰 무기 수출지역으로 기록되고 있다. 과거 가장 큰 무기 수입지역 이었던 중동국가들의 무기수요가 감소한 반면, 아시아 - 특히, 동북아 - 는 세계 최대 무기수입시장으로 성장했다.

1988년에서 1997년사이에, 아시아국가들의 재래식 무기 수입이 차지하는 몫이 31%에서 49%로 높아졌다. 1997년의 경우, 동북아의 무기수입액은 전세계 무기수입액 가운데 거의 30%를 차지했으며, 유럽국가들의 무기수출은 53%를 점유했다.²⁾

< 표-1 > 주요 재래식 무기의 이전량

(US \$m. 1990년 고정가 기준)

	수입량				수출량		
	1988	1994	1997		1998	1994	1997
World Total	36,331	20,231	25,156	World Total	36,331	20,231	25,156
Africa	2,104	575	260	Africa	106	10	14
Americas	1,773	1,847	2,058	Americas	10,282	10,843	10,949
Asia	11,421	5,903	12,344	Asia	2,536	1,034	266
North-East	3,837	2,311	7,527	North-East	2,516	759	197
South-East	1,376	2,223	2,934	South-East	18	32	69
South	5,191	1,345	1,711	South	1	4	-
Europe	11,827	5,844	4,872	Europe	23,011	8,086	13,202
Middle East	8,313	5,717	5,049	Middle East	377	233	408
Oceania	893	335	574	Oceania	18	26	318

Sourc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18-319.

2)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18-319.

< 표-2 >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 순위 10위까지의 공급국과 수령국을 나타내는 것이다. 국제무기거래시장에서 미국은 여전히 단연 가장 큰 공급국으로 남아 있다. 미국의 무기 이전량은 1997년의 경우 무려 43%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국제무기시장에서 유럽이 차지하는 몫이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유럽국가들 중에서도 특히 프랑스의 무기수출 증가는 더욱 두드러진다. 세계무기수출에서 프랑스가 차지하는 몫은 1996년에 9%에서 1997년에 13%로 크게 증가했으며, 그 결과 프랑스는 세계 제3위의 무기수출국으로 부상했다. < 표-2 >에서 보듯이, 상위 10위의 재래식 무기 공급국 가운데, 7개를 유럽국가들이 차지하고 있다. 반면 무기수입과 관련해서는, 1993-1997년의 경우 6개의 아시아국가들 - 대만, 터키, 한국, 중국, 일본, 인도 - 이 상위 10위의 무기 수입국에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재래식 무기거래는 항상 매우 집중된 소수의 국가들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면, 미국을 비롯해 프랑스와 영국은 1997년의 경우 전세계 모든 무기수출의 84%를 독점하고 있으며, 나머지 16%를 29개의 다른 국가들이 나누어 가지고 있다. 또한 10개의 상위 무기수입국들이 세계 무기수입량의 57%를 차지하고 있다.³⁾

< 표-2 > 상위 10위 재래식무기 공급국 및 수령국

순위	상위 10위 공급국			순위	상위 10위 수령국		
	공급국명	1997	1993-97		수령국명	1997	1993-97
1	USA	10,840	53,129	1	Saudi Arabia	2,370	9,834
2	Russia	3,466	15,246	2	Taiwan	4,049	8,238
3	UK	2,631	9,423	3	Turkey	1,276	7,012
4	France	3,343	7,760	4	Egypt	867	6,692
5	Germany	569	7,177	5	South Korea	1,077	5,345
6	China	170	3,531	6	China	1,816	5,053
7	Netherlands	504	2,178	7	Japan	584	4,554
8	Italy	408	1,781	8	India	1,085	4,428
9	Canada	81	1,339	9	Greece	715	3,949
10	Spain	639	1,230	10	Kuwait	411	3,391

(US \$m. 1990년 고정가 기준)

Sourc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294, 300-301.

3) *Ibid.*, pp.294, 300-301.

3. 무기이전이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 및 안보에 주는 함축성

무기이전은 가장 중요한 정치·군사적 상호작용에 속한다. 국제적인 무기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패턴이 있다. 첫째,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무기거래는 적은 소수의 공급자와 소수의 수령국들에 집중되었다는 점이다. 둘째, 무기이전의 패턴은 공급국과 수령국간의 안보협정의 성격에 의해 크게 지배된다는 점이다. 셋째, 공급국과 수령국간의 쌍무적인 관계는 무기 종속성의 의미에서 지속적인 듯하다. 무기거래의 이같은 패턴은 공급국과 수령국간의 관계에서 “종속성”과 “의존성”을 시사한다.

따라서 국제무기이전에 관계된 무기 수출국들과 수입국들은 각자 자신들의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정치·군사적 및 경제적 이득을 추구한다. 공급국들의 목표는 수령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영향력과 통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또한 공급국들은 무기판매를 통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데, 이것은 종종 국제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지목받아온 「군산복합체」와 관계가 있다.

무기이전은 아시아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부정적인 결과를 끼쳐 왔다. 우선 무기이전은 남북한간의 군비경쟁을 부추기고 한반도에서 군축을 어렵게 해 왔다. 둘째로, 무기이전은 한국의 미국에 대한 정치·군사적 종속성을 심화시키는 한편, 주한미군의 주둔을 합리화시키는데 이바지 해 왔다. 셋째로, 무기수입은 남북 모두에게 재정자원의 고갈시키고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결과를 초래케 했다. 무기수입은 큰 재정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령국의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다. 실제로 1990년대의 경우, 남한과 북한의 군사비 지출은 각기 GNP의 3.4-4.4%와 25.2-26.6% 차지했다.⁴⁾

4. 맺는 말

현 시점에서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해체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수립하며, 동북아에 안정과 평화를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긴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이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기이전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무기이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로 남북한은 공격용 무기의 수입금지에 상호 동의해야 한다. 둘째로 아시아 특히 동북아에 다자간 무기이전통제체제를 설립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효율적이고 유용한 무기이전 통제체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자간 통제체제의 규칙과 기준이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셋째로 무기이전에 대한 국제적인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1992년에 출범한 「UN재래식무기 등록제도」(UNROCA)가 존재하긴 한다. 그러나 무기이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임무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UN재래식무기 등록제도」를 새로운 무기범주의 추가와 등록 범위의 확대 면에서 제도를 조정하고 강화해야 한다. ■

4)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6/97*(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308.

Arms Transfers and Military Expenditure in Asia and Europe

Lee Chul-Ki
/ Dongguk University

1. Introduction

The Korean peninsula, despite the collapse of the Cold War on a global scale, still remains the last remnant of the Cold War. North and South Korea have maintained hostile relations and military tension, and have continued to race armaments. Meanwhile the political security environment of Northeast Asia in the post-Cold War era remains characterized by change and uncertainty.

Therefore Our impending tasks and missions are the dissolution of Cold Wa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lso it is critical to stability and peace on the Northeast Asia. In particular it is very important to the end of arms race and the achievement of disarmament in the Korean peninsula. But there are many obstacles to achieve the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First of all, the most obstacle is arms transfers which result in military tension and conflict and prevent disarmament.

The United State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ACDA) defines arms transfers as follows: Arms transfer (arms imports and exports) represent the international transfer(under terms of grant, credit, barter, or cash) of military equipment, usually referred to as “conventional,” including weapons of war, parts thereof, ammunition, support equipment, and other commodities designed for military use.⁵⁾

5) U.S. Arms Control and Disarmament Agency, *World Military Expenditures and Arms Transfers*

This paper examined the tendency and features of arms transfers in(or between) Asia and Europe, and analyze implications of arms transfers on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Another purpose of this article search for the control and transparency of arms transfers in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2. Tendency and Features of Arms Transfers in Asia and Europe

There has been a clear trend of increasing arms transfers since 1994 after a period of decline between 1987 and 1993. According to SIPRI estimates, the global volume of the trade in major conventional weapons for 1997 was 12 per cent higher than that for 1996. The value for 1997 was \$25,156 million at constant(1990) prices, up from the value of \$22,542 million for 1996.

As <Table 1> shows, Asia was the largest regional arms import market, and Europe was ranked as the largest arms exporters for 1997. While the demand from Middle East countries which was the largest arms importers has decreased, Asian - particularly North-East Asian - countries has grown.

	Volume of imports			Volume of exports			
	1988	1994	1997		1998	1994	1997
World Total	36,331	20,231	25,156	World Total	36,331	20,231	25,156
Africa	2,104	575	260	Africa	106	10	14
Americas	1,773	1,847	2,058	Americas	10,282	10,843	10,949
Asia	11,421	5,903	12,344	Asia	2,536	1,034	266
North-East	3,837	2,311	7,527	North-East	2,516	759	197
South-East	1,376	2,223	2,934	South-East	18	32	69
South	5,191	1,345	1,711	South	1	4	-
Europe	11,827	5,844	4,872	Europe	23,011	8,086	13,202
Middle East	8,313	5,717	5,049	Middle East	377	233	408
Oceania	893	335	574	Oceania	18	26	318

<Table 1> The volume of transfer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US \$m. at constant(1990) prices

Sourc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18-319.

1996(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7), p.189.

For the period 1988-97 the share of imports of major conventional weapons to Asian countries rose 31 per cent to 49 per cent. In 1997 North-East Asia accounted for nearly 30 per cent of global imports. European countries accounted for about 53 per cent of international arms exports⁶⁾

<Table 2> indicates the 10 leading suppliers and recipients of conventional weapons for 1993-97. In international arms trade market USA remains by far the largest supplier, accounting for 43 per cent of all major weapon deliveries in 1997. But European share of international arms market tends to increase since 1994. The increase in arms exports by France was more remarkable. France increased its share of conventional arms deliveries dramatically from 9 per cent in 1996 to 13 per cent in 1997, and was the third largest supplier. As <Table 1> shows, seven European countries were ranked among the 10 leading suppliers of conventional weapons. In the aspect of arms imports, among the 10 leading recipients for 1993-97 included six Asian countries: Taiwan, Turkey, South Korea, China, Japan and India.

<Table 2> The 10 leading suppliers and recipients of conventional weapons

10 leading suppliers				10 leading recipients			
Rank	Supplier	1997	1993-97	Rank	Recipients	1997	1993-97
1	USA	10,840	53,129	1	Saudi Arabia	2,370	9,834
2	Russia	3,466	15,246	2	Taiwan	4,049	8,238
3	UK	2,631	9,423	3	Turkey	1,276	7,012
4	France	3,343	7,760	4	Egypt	867	6,692
5	Germany	569	7,177	5	South Korea	1,077	5,345
6	China	170	3,531	6	China	1,816	5,053
7	Netherlands	504	2,178	7	Japan	584	4,554
8	Italy	408	1,781	8	India	1,085	4,428
9	Canada	81	1,339	9	Greece	715	3,949
10	Spain	639	1,230	10	Kuwait	411	3,391

US \$m. at constant(1990) prices

6)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318-319.

7) Ibid., pp.294, 300-301.

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6/97(London: Oxford

Source: Stockholm International Peace Research Institute, SIPRI Yearbook 1998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8), pp.294, 300-301.

The trade in conventional weapons has always occurred within a highly concentrated group of states. For example, France, the UK and the USA accounted for nearly 84 per cent of all deliveries in 1997. The remaining 16 per cent of international transfers of conventional weapons was accounted for by 29 smaller suppliers. Among the importers, the 10 leading recipients accounted for 57 per cent of World arms imports.⁷⁾

3. Implications of Arms Transfers on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Arms transfers belong to the most significant politico-military interactions. There is certain pattern of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as follows: First, as mentioned above, the trade is concentrated among a small number of suppliers and a relatively small number of recipients. Second, the pattern of arms transfers is heavily dominated by the nature of security arrangements between suppliers and recipients. Third, bilateral relationships seem to be durable in the sense of weapons dependencies. These suggest "dependency" and "interdependence" in relationship between suppliers and recipients.

Therefore arms exporters and importers which involve in international arms transfers have relatively their objectives. They seek after their politico-military and economic benefits. The objectives of suppliers are the politico-military influence on and control over recipients. But also suppliers pursue the economic advantages of arms sales, relating to the military-industrial complex which often is responsible for international conflict.

Arms transfers have brought about the negative effects on peace and security in Asia and on the Korean Peninsula. First of all, they have promoted arms race among both Koreas and have interfered with disarmament in the Korean Peninsula. Secondly arms transfers intensified politico-military dependency of South Korea on USA, and contributed to rationalization of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Thirdly arms transfer resulted in the exhaustion of financial

7) *Ibid.*, pp.294, 300-301.

resources and economic crisis of both Koreas. Because they absorb large financial resources, arms imports interfere with the economic development of recipients countries. In fact, military expenditure of North and South Korea relatively have amounted up on average to 25.2-26.6 per cent and 3.4-4.4 per cent of GNP in 1990s.⁸⁾

4. Conclusions

At the present time our immediate tasks are the dissolution of Cold War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rmanent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achievement of stability and peace on the Northeast Asia. In order to accomplish this goals, it is necessary to control and constraint arms transfers.

Therefore in relation to control over arms transfer, I suggest as follows: Firstly North and South Korea shall agree mutually to prohibit from importing arms for offensive. Second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strengthen the multilateral arms transfer control regime in Asia, particularly in Northeast Asia. To make effective and useful arms transfers control regime, the rules and standards of regime must be fair and objective. Thirdly it is important to reinforce the international transparency in transfers of weapons. Of course there is the UN Register of Conventional Arms(UNROCA) which was implemented in 1992. But in order to discharge properly its tasks, UNROCA must be adjust and reinforce in the aspect of the addition of new weapons categories and the expanding the scope of the register. ■

8)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6/97*(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1996), p.308.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김 용 한

/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1. 미국은 아시아에 10만 명의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키고 싶어한다.

1992년 뷰캐넌(대선 때) : “냉전 시대도 끝나고 한반도에는 어떤 긴장도 없기 때문에 미국은 해·공군력만 남겨 놓은 채 지상군을 한국에서 철수시켜야 한다. 한국은 북한의 20배 규모에 달하는 경제력을 갖고 있으며 인구도 2배나 되고 미국으로부터 첨단무기를 공급 받고 있다. 제2의 한국 전쟁이 발발할 경우 미국이 첫 희생자가 되지 않도록 미군을 철수시키고 그 자리를 한국군으로 대체해야 한다.”

1997년 2월 24일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와 회담을 갖고) : “아시아지역에 전개돼 있는 미군 10만 명 체제를 유지한다. 주일 미군도 안보상 불가결하며 오키나와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서 민감하게 대응할 것이다.”

1997년 5월 21일 윌리엄 코언 미국방장관(미하원 국가안보위원회에서) : “앞으로도 한일 양국의 반대가 없는 한 주한·주일미군을 현재 수준으로 무기한 주둔시킬 것이다.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10만 미군은 미국의 국가 이익 수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한국과 일본이 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동아시아 지역에서 상황이 바뀐다면 우리는 미군의 주둔을 조정해야 할지도 모르나, 그렇지 않다면 미군을 무기한 주둔시킨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 주한·주일미군은 동아시아 정세의 안정을 이룩하는데 매우 중요하며, 그 역할을 주변국가 사람들이 모두가 이해하고 있다. 일본도 하시모토 류타로 총리가 미군의 주둔을 원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9년 6월 1일 뷰캐넌(워싱턴의 내셔널 프레스클럽 초청 간담회에서 한반도 문제에 관한 질문을

미군기지 (공역지) 92개, 47개 / (개지여 운동성임.)
→미군에게 제공해준 땅
운동에 의해 땅, 전방 공역지.
아시아 주둔 미군과 미군 기지 되찾기 운동 ■

받고) : 나는 주한미군을 지금 당장 철수시켜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한반도에는 지금 긴장 상태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페리 조정관이 추진하는 것을 강력히 지지하고 있다. 무엇보다 페리 조정관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있다.

2. 일본인들은 주일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구분	주일미군의 주둔 목적을 뭐라고 생각하나?			주일미군기지의 규모는 어떻다고 생각하나?	
	미국의 세계전략을 위해	일본의 방위를 위해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막기 위해	축소하는 게 좋다	지금 이대로가 좋다
일본인	38%	31%	19%(24%)	63%	28%
미국인	34%	12%	49%(56%)	31%	63%

(괄호 안은 25 ~ 29세의 젊은 층 비율)
(1999년 4월 12일 <아사히신문>과 미국의 루이스 해리스 사 공동 조사)

1) 일본의 일반인들은 주일미군이 미국의 세계 전략 때문에 존재하며, 미군 기지는 축소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1997년 11월 21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오키나와의 주요 정당들과 시민 단체들이 미군 기지 반환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반발, 거부함에 따라 6개월 늦게 기노완 시에서 7백명이 참가한 가운데 거행된 오키나와 반환 25주년 기념식에서) :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집중을 완화하는 한편 오키나와를 자유 무역 지대로 전환시키겠다. 오키나와가 아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막대한 기여를 했으므로 전국이 부담을 나누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1998년 12월 22일 노카 히로무 일본 관방 장관 :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 주둔 미군 감축 협정에 따라 오키나와의 군사 훈련장 한 곳을 반환했다. 이날 반환된 나하 훈련장은 4백80ha와 7천9백ha의 수역으로 96년 체결된 양국간 협정에 따라 미군이 일본에 반환키로 한 11개 시설 중 첫번째 것이다. 미국은 이 협정에서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지의 20%를 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반환은 오키나와 주둔 미군을 줄이려는 노력이 진전을 보였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내 미군 시설의 재편과 감축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2) 전에는 소련의 침략 위협을 막아 주는 기능을 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1998년 6월 17일 호소카와 모리히로 전 총리(미국의 외교 정책 전문지 Foreign Affairs 7~8월호에

실린 <일본에 미군 부대가 필요한 것인가>에서) : “2000년까지 3만7천명의 주일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과 미국이 대등한 관계에서 새로운 동맹 관계를 맺어야 한다. 냉전 종식 후 옛 소련의 위협이 사라지고 일본이 충분히 자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 만큼 주일미군의 필요성은 사라졌다. 이제 미군이 일본을 떠날 때다. 1995년 미국과의 합의에 따라 미군 주둔에 대한 일본의 연간 부담이 50억 달러로 늘어나 최근 침체를 겪고 있는 일본 경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00년에 만료되는 이 합의를 경신하지 말고 미군을 떠나도록 해야 한다.”

3) 적어도 미 해병대의 규모는 줄이고 싶어한다.

1997년 2월 24일 하시모토 류타로 일본 총리(매들린 올브라이트 미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 “중장기적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고려하면서 양국의 안보상의 요청을 충족할 수 있는 군사 체제와 방위 정책에 관해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차 한반도 등 주변 정세의 안정을 전제로 미 해병대의 규모 감축 문제를 협의하자.”

4) 주일미군이 떠날 때를 대비해 중국의 강대국화를 핑계로 핵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한다.

1996년 말 일본 방위연구소(<안보 환경의 장기 예측과 일본 방위의 존재 양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 “한반도의 통일이 실현되면 미국이 기존의 동아시아 전략을 변경할 것인 만큼 주일미군의 주둔도 크게 변할 가능성이 있다. 아울러 중국의 강대국화가 필연적이다.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이 유지되는 한 중국이 패권적인 행동을 취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중국에 대한 일본의 억지력 확보를 위해서는 원자력 잠수함의 건조가 필요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5) 최대한 주인 노릇을 하며 자존심을 지키고자 한다.

일본은 주일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배려 예산”이라고 부른다. 주일미군의 편의 제공 차원에서 주인으로서 “배려”한다는 뜻이다. 또한 주일미군을 “집 지키는 개”로 비유하기도 한다.

1997년 10월 4일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일본 총리(홋카이도 오타루시의 강연회에서) : “(일본은 주일 미군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파수견으로 쓰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돈을 내고 미군을 주둔시켜 파수견으로 쓰는 격이며 그것이 현명하다.”

6) 틈만 있으면 주일미군 지원 예산을 깎고자 한다.

1997년 8월 3일 일본 정부(<도쿄신문> 2일치 보도) : “주일미군 주둔 경비 가운데 일본 부담분을 내던 예산에서 삭감하기로 방침을 굳히고 미군쪽과 협의에 들어갔다. 재정 구조 집중 개혁 기간인 98년부터 3년 동안 전체 방위비를 마이너스 편성한다는 내각의 결정에 따라 주일미군 주둔 경비 세출도 삭감하기로 했으며, 삭감 폭과 대상 항목을 미군쪽과 협의 중이다. 일본 정부가 주일미군에 대한 편의 제공 차원에서 지난 78년부터 도입된 ‘배려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삭감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주일미군의 숙사와 가족 주택, 복리·후생 시설 건설에 할당된 제공 시설 정비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주일미군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배려 예산은 1996년의 경우 2천7백 27억 엔이었으며 제공 시설 정비비는 9백53억 엔이었다.”

7) 일반 국민은 물론 유명한 고위급 정치인들이 주일미군에 대해 공공연한 반대 운동을 벌인다.

1995년 9월 4일 주일미군 3명이 오키나와 소녀를 유간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오키나와 현 오오타 마사히데 지사는 8만 5천명을 모아 “현민총궐기대회”를 벌였다. 뿐만 아니라 자기 땅을 더 이상은 미군 기지로 임대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지주들의 편을 들어 대리 서명을 거부하다가, 일본 정부에게 행정 소송을 당해 패하기도 했다. 1996년 9월 8일에는 미군 기지의 정리 축소와 미일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의 찬반을 묻는 현민 투표를 실시하여 유효 투표의 90%가 넘는 찬성표를 얻어내기도 했다. 그는 일본 정부의 반대를 물리치고, 미국을 방문해 미국의 상하 양원 의원들에게 미군의 범죄와 각종 사고 피해를 알리며, 오키나와 주둔 미군 기지의 축소나 본토 이전을 요구했다.

1998년 11월 오키나와의 미군 기지 반대 운동의 상징 치바나 쇼우이치 씨가 시의원에게 당선되었다.

1999년 2월 오이타 현 인구 10만 정도의 작은 도시 유후인 마찌에서 열린 주일미군 사격 훈련 반대 집회에 무라야마 전 총리와 오오타 지사가 함께 초청 받아 연설했다.

3. 북한은 주일미군과 주한미군을 어떻게 생각하나?

북한은 최근 들어 주한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기도 하고, 주일미군이나 주한미군 모두 북한에 대한 위협으로 여기고 즉각적인 동시 철수를 주장하기도 한다. 겉으로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지만, 속으로는 남한의 미군 주둔이 여러 가지 점에서 북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1995년 9월 북한을 방문한 셸리그 해리슨 미국 우드로 윌슨 연구소 수석연구원 : “리찬복 북한군 판문점 대표한테 ‘우리는 현실적인 미국의 아시아 전략상 미군이 당장 내일 철수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북한이 원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가 아닌 적대적 관계의 종식이다. 정전 체제가 해체되고 유엔 사령부가 없어짐에 따라 미군의 소임이 바뀐다면 미군의 존재를 용인하기가 쉬울 것이다.”

1998년 3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2차 4자회담에서 : “주한미군 철수 문제의 의제화에 애로가 있다면 주한미군 지위 문제로 바꿀 수 있다.”

1999년 1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4자 회담 4차 본회의에서 : ‘주한미군의 지위를 “평화군”으로 바꾸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1998년 5월 16일 북한 <노동신문> 논평 : “주일미군이 미국의 대조선 대아시아 침략정책 수행에 복무하고 있다. 일본은 주일미군을 완전히 철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미

군의 남조선과 일본 주둔은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을 강화해 온 일본에도 그 책임이 있다. 일본은 조선 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진심으로 바란다면 주일미군과 남조선 주둔미군의 완전 철수를 요구하고 미국과의 군사적 결탁을 그만두어야 할 것이다. 일본 민주당 대표가 최근 오키나와 주둔 미해병대를 일본 밖의 한국이나 기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미국측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일미군 무력의 이전이 아니라 그를 완전히 철수시켜야 한다. 미군의 남조선 및 일본 주둔은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닌 침략을 위한 것이다. 남조선과 일본에 미군이 있는 한 조선 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평화와 안전이 보장될 수 없다. 주일미군과 남조선 주둔 미군은 동시에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

1999년 4월 8일 민민전 방송 : “김대중이 지난 6일 오후 육·공군 장성 진급 및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한미군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떠들었다. 영구주둔을 고창한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고 타당성도 전혀 없는 꾀변이다. 온 겨레와 세계민중의 요구대로 주한미군을 지체 없이 철수시키는 대책을 취해야 한다. 이북의 남침위협이라는 것은 흑백을 전도하는 파렴치한 주장이다. 미군이 반드시 한국에 영구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다. 주한미군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위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국 일본의 세력확대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말로 되는데 이것은 사실과 맞지 않는 소리다.”

1999년 8월 5일 북한 대표 김계관 외무성 부상(제네바 4자 회담 개막 기조 연설에서) :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주한미군 철수와 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그동안 나름대로 노력해 왔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어 4자회담을 계속하는 데 회의감이 있으며, 북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다. 현 정세에서 미국은 북을 조직적으로 압살하고 있다.”

4. 한국인들은 주한미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그 동안 우리 정부는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비밀’로 해 올 정도로 민감했다. 지난 4월 김대중 대통령의 발언과 그 발언의 취소 과정을 볼 때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거의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남한에서 정부 당국자나 고위 정치인, 또는 원로 퇴역 정치인이 주한미군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부정적으로 거론하는 일은 없다. 주한미군의 지위를 ‘평화군’으로 바꾸면 주한 유엔사를 해체해야 하고, 그러면 북한의 남침이 있을 경우 군사적 대응을 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통일 후에도 주둔해야 한다”는 말밖에는 못한다.

일반 국민은 물론 시민 사회 운동 단체 가운데도 주한미군 문제를 다루는 단체가 거의 없으며, 언론도 상당히 소극적이다. 일반 국민들이 주한미군의 존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권위 있는 언론이나 여론 조사 기관에서 자세하게 조사한 적도 없다.

다른 나라 국민들이 그 나라에 주둔하는 미군들에게 어떻게 처신하고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하면,

“그 나라는 우리 나라와 상황이 다르다”는 반응을 보이는 이들이 많다. 남북 분단과 6.25를 예로 드는 것이다. 그러나 일본을 가르지 않고, 우리 나라를 분단시킨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눈을 감는다.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삼고 전쟁을 일으켰다가 저서 미군이 주둔하는 빌미를 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힘이 없는 민족이라 어쩔 수 없다는 논리도 많이 나온다. 그러나 이 또한 힘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문제라는 점은 애써 외면하려 든다.

1999년 4월 1일 박선섭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원(‘국방 논집 제44호’ 기고에서) “남북관계가 진전돼 북한의 위협이 격감하거나 사라질 경우 한·미 양국에서 주한미군 문제가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 문제와 관련된 여러 사항중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가 될 것이다. 한국에 미군이 주둔함으로써 주변국의 경쟁적인 한반도 안보 개입 견제와 미국과의 안보 유대 강화 등의 이점이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은 이해를 달리하는 주변국의 반발을 초래, 균형적인 대외 우호 선린 관계에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다. 북한의 위협이 감소될 경우 주한미군의 주둔 규모와 전력 형태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보다는 동북아 전체 지역 안정에 비중을 두기 때문에 그 규모를 크게 줄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다. 토지 및 시설 제공에 따른 직·간접적인 부담과 국민 정서가 그 근거다. 이밖에도 전시작전권의 환원 등 현재의 한·미 연합지휘체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1999년 4월 1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비보도 전체. 기자들에게) : “북한이 4자회담에서 주한미군의 지위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북한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미국에 이런 뜻을 밝혔다.”

1999년 4월 6일 김대중 대통령(군장성 보직신고를 받는 자리에서) : “북한의 침략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세력 균형과 현상 유지를 위해서 통일 후까지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다. 미군이 주둔해야 동북아의 안전이 유지되며, 미군이 없을 때 중국과 일본의 군비 경쟁은 심해진다.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던 북한이 최근 ‘평화군이라면 미군이 주둔해도 좋다’고 미군의 존재를 인정하는 말을 했다. 자세한 내용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지만 북한의 이런 태도는 처음 있는 일이다. 이는 미군이 철수하면 중국과 일본의 군비경쟁이 일어나고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리의 주장에 북한이 동의한 것이고, 우리의 햇볕정책에 대한 호응이라고 생각한다.”

1999년 4월 6일 외교통상부 고위당국자 : “평화 체제가 구축되기 전이라도 한반도 전체 군대의 감축 차원에서 주한미군의 철수, 지위 변경, 재배치 등 모든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주한미군 문제만을 따로 떼어 논의할 수는 없지만 신뢰 구축 조처의 일환으로 한반도 전체에 주둔하는 인민군과 국군, 주한미군 문제를 함께 논의한다면 이에 응할 수 있다. 미국도 우리와 같은 입장이다.”

1999년 4월 11일 박지원 청와대 대변인 : “대북 정책 관련 중대한 문제를 일부 언론이 ‘설’을 근거로 보도한 것은 국익 차원에서 생각해 볼 문제다.”

1999년 4월 14일(청와대에서 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 “그 얘기에 대해선 직접 답변하지 않겠다. 한미 방위조약에 대한 준수의지는 확고하다. 주한미군은 한미방위조약에 의해 주권국가끼리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제3자가 관여할 수 없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확립되기 전에 주한미군 문제를 분리해 논의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1999년 4월 15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한국프레스센터에서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강연을 하는 자리에서) : “주한미군 문제는 한·미간 논의할 문제이며 남북간이나 미·북간에 논의할 성격이 아니다. 북한이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이지 우리 정부가 북한의 주장을 논의하겠다는 것은 아니다. 4자회담에서 미국은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 평화체제구축의 마지막 단계에서 한반도내 모든 군사력의 배치와 규모를 논의할 때면 몰라도 그전에는 논의 불가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같은 입장이다.”

5. 떠나 보낸 미군을 다시 맞아 들이게 된 필리핀

1991년 미군기지 임대 기간 연장 거부로 미군을 내보낸 필리핀은 8년 만에 미국과 군사 협력을 부분적으로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필리핀은 최근 240km 정도 떨어진 남사군도의 한 산호초에 중국이 설치한 시설이 군사 작전을 위한 것이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필리핀과 미국 사이에 아직까지 미군 기지를 부활하자는 이야기가 오가는 것은 아니지만 양국은 좀 더 온건하고 정치적으로 지속 가능한 군사 협정을 검토하고 있다. 두 나라가 고려하고 있는 군사 협력의 범위는 합동 군사 훈련, 미국 대형 함정의 필리핀 항구 정기 방문 같은 것이다.

1999년 5월 필리핀 상원은 미군의 필리핀 영토 제주둔을 위한 법적 토대가 될 ‘방문군 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을 압도적 표차로 승인하고, 2000년 초 합동 군사 훈련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6.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의 현황과 전망

“독도만이 아니라, 미군기지도 우리 땅이다. 오산 미 공군기지가 오산에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미군 기지의 임대 기간을 정하고, 임대료를 받으며, 기간 종료 뒤에는 재계약이나 반환을 협상해야 한다. 방위비 분담금 지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 아울러 불평등한 SOFA를 전면 개정하고 나아가 한미상호방위조약도 고쳐야 한다. 그 전에 ‘미군기지 주변 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미군기지는 지역 주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에는 퇴폐와 범죄와 환경 파괴의 주범이요, 전쟁 때는 적군의 타겟일 뿐이기 때문이다.”

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을 하는 이들은 요즘 이런 주장을 한다. 구호만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라, 시민과 함께 하는 운동을 벌이려고 애쓰고 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의 시민 사회 운동 단체끼리 연대하여 벌일 수 있는 운동을 지향한다. 그런 점에서 미군 철수나 도심지 미군기지의 지방이

전, 또는 자기 지역으로 오는 미군기지 반대 같은 운동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현재 남한에는 95개의 미군기지가 있고, 전체 면적은 8천 28만평이나 된다. 미군기지 관련 주민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은 동두천에서 의정부, 서울, 인천, 안양, 평택, 화성, 하남, 춘천, 원주, 군산, 대구, 부산까지 모두 13 지역이다.

그 가운데 지난 1997년 8월 22일 결성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동대책위원회>은 안양, 화성을 뺀 11지역과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녹색연합>이 가맹된 조직이다. 지역이나 부문별 운동역량이나 역사의 편차가 심하다.

국제 연대는 1992년 5월부터 이루어졌으며, 최근에는 일본, 오키나와, 필리핀, 미국 등 여러 나라의 평화 운동 단체들과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는 서울에서 ‘아태 지역 평화를 위한 미군기지 관련 국제 전략회의’를 가졌으며, 올 10월에는 오키나와에서 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벌이고 있는 평화 운동가 40명 정도를 초청해 “한-오키 국제 심포지움”을 가질 계획이다.

미군기지 되찾기 운동이 지역 연대와 국제 연대에 심혈을 기울이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각 지역 운동은 힘이 없다는 점이다. 한 사장 밑에 있는 노동자들이 서로의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를 뛰어 넘어 튼튼한 노동 조합을 건설해야 살 수 있듯이, 미국이라는 세계 유일 최강의 나라를 상대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지역과 국경을 넘어 연대하는 길밖에는 살 길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달 말쯤 <SOFA 전면 개정 국민 행동>(가칭)을 결성할 계획을 갖고 관심 있는 서울의 시민 사회 단체들과 한 차례 모임을 갖기도 했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시민 사회 운동을 통해서 SOFA를 전면 개정하고자 말겠다는 것이다. 이 운동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성공할 가능성도 크다.

■

The U.S. Armed Forces in Asia and the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ed Bases

Kim Young-Han

/ United States Military Bases Return Korean Committee

1. U.S. wants to station a hundred thousand of armed forces in Asia "indefinitely"

2. What do Japanese think about U.S. Armed forces in Japan?

① Citizens in Japan think U.S. Armed forces in Japan stations due to the U.S. leading world order and it is better to reduce U.S. armed bases.

② Before, U.S. forces have played the protecting role from the Soviet invasion, but now it's time for them to leave.

③ At least, Japanese would like to reduce the size of U.S. Navy.

④ In case of retrieval of U.S. Armed forces in Japan, Japanese want to develop a nuclear submarines with the excuse of Chinese Reinforcement.

⑤ Japanese want to keep their pride playing host at times.

⑥ In any occasion, Japanese would like to cut down the budget for supporting U.S. Armed

forces in Japan.

⑦ Famous high-class politicians as well as ordinary citizens demonstrate against the U.S. Armed forces in Japan in public.

3. What does North Korea think about U.S. Armed forces in Japan and in Korea?

Recently, North Korea seems to recognize the existenc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and often it strongly advocates the retrieval of U.S. armed forces in Japan and Korea at the same time, considering U.S. forces as a threat against North Korea. Apparently, North Korea promotes the retrieval, it seems to think that U.S. armed forces in South Korea benefits North Korea in some aspects.

4. What do South Koreans think about U.S. Armed forces in Korea?

For years, South Korean government had been so sensitive on this matter that they would not publicize it would be dealt in Four Party Meeting. The official perspective of government on U.S. armed forces in Korea has not changed much, seeing the speech of President Kim Dae-Jung and his cancelment.

So far, there is no negative address from authorities, high-class politicians, or veteran former politicians on the matter of U.S. Armed forces in Korea in any way. If there is any change in the stance of U.S. armed forces to 'Peace troops', United Nation's office in Korea has to be dissolved. Then, in case of North Korean invasion, it is necessary to get votes from UN, which makes it difficult to respond militarily as quickly as possible. That makes South Koreans go for the stationing of U.S. armed forces even after reunification.

There is few civil organizations dealing with the issue of U.S. forces as well as general citizens and mass media is quite passive in addressing this issue. There has been no exact survey by reliable media or public sensus corporation on general opinions of people on it, as well.

There are many who responds "Those countries are different from ours", if someone tries to explain the treatment of people from other countries about U.S. armed forces in their lands. They take National Partition and the Korean war as examples. However, they often ignore the fact that

none other than U.S. divided Korea, not Japan. It is the same for Japan, which colonized Korea, went into war and so provided the excuse for U.S. troops stationing. They say for Korea is not enough strong country, so we cannot help it. Yet they try to turn away from the fact it is not a matter of power, but matter of justice.

5. Philippines which got to take U.S. Armed forces again once left

In 1991, Philippines made U.S. armed forces retrieve from its territory when they refused to expand the rental period of U.S. Armed bases. However, after 8 years, Philippines has started to renew its military cooperation with U.S. again. It is worrying about the facilities set by China in lagoon region of Namsa Island 240 kilometers far from Philippines, which might be military facilities. Even though there is no agreeing upon the revival of U.S. armed bases in Philippines so far, both authorities are considering to make a milder and more politically durable Military Agreement. The range of military operation considered includes from combined military drill to regular visits to ports in Philippines by U.S. full sized vessels.

The Upper House of Philippines approved the Visiting Forces Agreement(VFA) which provides legitimate fundamental for U.S. forces' restationing by a sweeping majority of votes in May 1999 and try to put forth the plan for combined military drill in early 2000.

6. The present situation and prospect for the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y bases in Korea

"U.S. Armed bases belong to our territory like Dok-Do Island. Most U.S. army bases in Korea should be set, charged rental fee and be negotiated recontract or return of them after the expiry. Besides we should be reduce the budget of our sharing defense. The in equal ROK-US Status-of-Forces Agreement(SOFA) should be reformed in full scale and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should be revised as well. Before these measure,

Those who take part in movement for the Return of U.S. Army bases in Korea argues;

"Special Law for supporting suburban areas around U.S. army bases" needs to be legislated. U.S. armed bases have been the main cause of destruction of environment, crimes and degeneration and target of enemies, not the protector of Korean people."

They try to broaden citizen participation and intend to make network between civil organizations in the regions of U.S army bases. In that aspect, it is different from movements for U.S. retrieval or transfer of bases into other regions.

At present, there are 95 U.S. army bases in South Korea, they occupy eighty million and twenty eight thousand Pyung. The regions which are participating in movements related with U.S army bases are; Dongduchon, Seoul, Inchon, Anyang, Pyungtaek, Hwasung, Hanam, Chunchon, Wonjoo, Kunsan, Daeugu and Pusan, all thirteen areas.

Among them, "Combined Committee for Return of U.S Army bases in Korea" is the organization covering 11 regions, excluding Hwasung and Anyang, adding "Center for eradication of crimes committed by U.S. solders" and "Green Confederation for Environment". There are difference between history and the size of organization according to regions or sectors.

International solidarity was established since May of 1992 and recently there are activities of exchange with Peace movement organizations from many countries such as Japan, Okinawa, Philippines, U.S. In particular, from June 25th to 28th there held "International Strategic Meeting on U.S. army bases for Asian-Pacific peace" in Seoul and in this September, "Han-Oki International Symposium" will be held, visiting about forty peace activists who participate in the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y bases in Okinawa.

There are evident reasons why the movement for return of U.S. army bases have bee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regional solidarity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As a strong labour union should be built in order to survive in this devouring capitalist system, there is no way other than solidarity across regions and countries to make the movement against U.S., the most powerful force, more effective.

We are planning to establish <People's action to reform SOFA> later this month and had a meeting with civil social organizations in Seoul interested in advance. Taking advantage of this chance, we hope that we can do full-sized reform of SOFA through civil movements. This will not take much time and hopefully have greater chance of succeeding.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과 동북아 대안안보체제 구축을 위한 과제

김 창 수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문제의식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문제는 반세기 가량 지속된 한반도 정전체제의 특수성 때문에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띠고 있다. 국제적인 관례로 보더라도 정전협정이 40년이 넘게 지속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한반도 정전상태에 대한 국제법적인 시각 역시 다양하다.

평화체제 수립은 남북 당국의 통일정책에서 현안이 되는 문제이다. 통일된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정전체제라는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한 논의는 매우 현실적이고 실천적이어야 한다.

그 동안 국내학계에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대하여 정전협정의 성격과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에 대하여 주로 법리적인 차원에서 논의를 집중했던 것이 사실이다. 게다가 은연중에 평화체제에 대한 논의를 실용적인 관점보다는 이데올로기적인 관점에서 진행시켜왔다. 그 결과는 당연히 남북 당국 가운데 어느 한편의 정당성과 주도성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이었기에 정전체제를 변경시키고 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현실적인 정책논의는 이루어질 수 없었다. 물론 이러한 수준에서 논의가 진행되었던 것은 현실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상황이 조성되지 않았다는 상황적 제약에서 비롯되는 바도 있다.

체제의 정통성 경쟁과 선전차원에서 진행된 평화협정 논의는 그렇지 않아도 민족내적인 문제와 국제적인 문제가 얽히면서 복잡하기만 한 평화체제 수립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 요인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여섯 차례의 4자회담 본 회담의 진행으로 평화체제 수립에 대하여 더 이상 명분론적인 논의에 매달리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

이제 평화체제 수립은 논의나 검토의 단계가 아니라 정전체제라는 현상을 변경시키고 평화체제라는 새로운 상황을 창출하는 실천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여섯 차례의 4자회담 본회담은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끝났으나 실망할 필요는 없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변화는 인내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할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미 당사자론과 한국정부의 당사자 자격

평화협정 체결과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당사자 문제이다. 당사자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은 74년부터 북미 당사자를 주장하고 있고, 남한 정부는 실질적인 남북 당사자를 의미하는 4자회담을 주장하고 있다. 통일운동 진영 내부에서는 북미 당사자를 주장하고 있는 입장과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입장으로 나누어져 있다.

평화협정 논의과정에서 제기되는 북미 당사자론의 논거는 대략 1)정전협정의 서명당사자인 북한과 미국이 체결해야 한다, 2) 평화를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할 일이 있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 할 일이 있으므로, 북한과 미국 사이에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한과 북한 사이에는 남북 기본합의서를 이행하면 된다, 3)남북은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니므로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없으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해서는 안되고 기본합의서만 이행하면 된다, 4) 남한 정부는 평화협정 체결의 의지와 능력이 없으므로 남한 정부가 참여하면 평화협정 체결 과정이 지연될 뿐이다 등으로 모아진다.

하지만 북미 당사자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결정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첫째, 국제적인 사례를 보더라도 정전협정의 당사자와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정전협정의 당사자 문제를 따지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니라 유엔이 당사자라는 복잡한 법리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

둘째, 정전협정 제 60조에 명시된 '평화적 해결을 보장'하기 위하여 '한급 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기 위한 회담에 미국뿐만 아니라 남한정부도 참가하였다. 53년 10월의 판문점 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 4개 국가가 참가하였다. 정전협정 제 60조에 근거한 정치회의인 제네바 회담에도 남한은 참가한다.

정전협정 당사자에 대한 해석에서 평화협정 당사자를 찾으려는 그동안의 시도는 정전협정 60조와 이에 근거하여 열린 1953년의 판문점 예비회담과 1954년의 제네바회담의 역사적 경험에 비춰 보더라도 실천적인 논쟁이 아닌 것이다. 정전협정 60조에는 '관련 당사국'이 정치회담의 주체라고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판문점 예비회담에는 남북한과 미국, 중국 등이 참가했고, 제네바 회담에는 남한과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제외한 한국전쟁 참전 15개국 그리고 북한, 중국, 소련 등 19개국이 참가했다.

따라서 이런 역사적 경험을 무시한 채 진행된 평화협정 당사자 논란은 정치공세 차원에서 유용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평화협정 체결을 진전시키지는 못한다.

셋째, 74년 이전에 북한은 남한을 평화협정의 당사자로 인정하고 남북 평화협정을 주장하였다.

넷째, 남북 합의서도 국제법적으로 조약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국회비준을 촉구하였다. 국제법적

으로 조약의 성격을 지니는 남북 합의를 채택하고 이행한다고 그것이 두 개의 국가로 고착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이 평화협정에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남북한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로 만드는 것은 아니다. 정전협정에 남한이 서명하지 않은 것은 남북한이 협정을 체결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 아니라 남한 정부가 정전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다섯째, 남한 정부도 4자회담을 통하여 평화협정을 체결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평화협정에 대한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여섯째, 남한 정부도 전쟁 참전국가이고 70만의 대군을 보유하면서 남북군사대치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평시작전통제권을 반환받았고, 비무장지대 일대에서 빈번하게 북한과 충돌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한정부를 제외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없다.

일곱째, 남한정부를 제외한 북미 평화협정은 현실적 가능성이 없다. 남한정부의 강력한 반대로 평화회담 자체가 파탄될 것이다.

여덟째, 북미 평화협정 주장은 남한 국민들의 동의를 구할 수 없다. 남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 평화협정 체결운동은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국내적인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북미 당사자론은 설득력이 약하다. 4자회담이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북미 당사자론을 주장하는 북한이 한국정부가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남북 당사자론과 미국의 당사자 자격

2+2 방식의 회담을 비롯해서 남북한이 평화협정의 당사자가 되어야 한다는 모든 주장은 미국을 당사자에서 제외시킨다는 한계가 있다.

미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명백하다. 미국은 한국전쟁의 참전국가이며, 정전협정 체결과 정전체제 유지의 당사자이고,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통하여 주한미군을 주둔시키면서 한반도 군사적 분쟁의 한 당사자가 되었다. 또한 한국에 첨단무기 배치를 비롯한 군사력 증강의 담당자이고, 한국군과 함께 정기적으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아직도 한국군의 전시 작전통제권을 장악하고 있으므로 한반도에서 실질적인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평화협정의 책임 있는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남북 당사자론을 주장하는 한미 양국이 미국 정부의 당사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이 4자회담을 성공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된다.

<제언 1> 남북한과 미국의 3자 직접 대화로 평화협정 체결을

4자회담에서 미국의 지위와 역할 문제가 논란이 되는 것은 현재와 같은 4-2 구상에서는 당연한 결과이다. 한반도 평화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제외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정부와 미국은 현재의 4-2 전략을 수정해서 4자회담의 틀 속에서 미국이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북한을 4자회담으로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다. 미국이 4자회담에서 평화협정체

결의 당사자로 참여하는 것은 4자회담을 실질적으로 평화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담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다.

한국정부가 보다 전향적으로 평화협정 논의과정을 실질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제안하는 것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4자회담의 구도속에서 남북한과 미국이 당사자로 참가하는 3자회담을 보장하는 방식을 다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언2> 4자회담의 운영방식 제언

한반도 통일문제가 민족내적인 문제이면서 동시에 국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을 타개하는 것이 통일정세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과제이다.

즉 4자회담의 틀속에서 남북대화와 북미대화가 진행되는 이원적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4자회담의 틀속에서 남북한과 북미 사이에 신뢰를 구축하는 절차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4자 회담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사안이다.

4자회담 본회담에서 4자회담의 운영방식과 진행단계를 다음과 같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1단계

4자회담에서 의제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합의하고, 운영방식과 단계를 협의한다. 남북한과 미국의 3자회담을 보장하는 운영방식을 제안함으로써 구체적 의제설정을 요구하는 북한을 설득하여 포괄적으로 의제설정에 합의한다.

2단계

남북회담과 북미회담으로 4자회담 운영을 이원화한다. 북미회담에서는 기존에 4자회담 틀 밖에서 진행된 북미 장성급회담 등을 수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남북회담은 남북기본합의서 5조에서 명시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에서 약속한 불가침문제 등 남북 사이에 군사적인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한다.

3단계

남북한과 미국이 3자회담을 개최해서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중국이 보증하는 3+1 회담을 추진한다. 남북한과 미국이 참여한 3자회담에서 2단계 회담의 성과를 수용, 발전시켜서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 4자회담에 참여한 중국은 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한다.

4단계

이와 같은 3단계를 거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기반이 마련될 경우 4자회담에 일본과 러시아가 참가하는 '4+2 회담'으로 발전시켜서 동북아 평화를 위한 안전보장체제 구축으로 나아가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4자회담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4+2회담'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으나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는 점이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마련되지 않고서는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수립이 현실적인 과정으로 진입할 수 없을뿐더러, 한반도 문제를 선부르게 국제화시키는 우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제언 3> 주한미군 문제

4자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주한미군 문제는 역동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북한이 4자회담 1차 본회담이 시작되기 이전에는 주한미군 문제에 대해서 매우 실용적으로 접근하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4자회담에서 북미대화의 틀이 마련되면 주한미군 문제는 다른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다. 북한과 미국이 대화하고 나아가 관계 정상화를 모색한다면 북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의미와 역할은 현저하게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문제를 의제로 하는 것은 4자회담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아닌 것이다. 4자회담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에 대한 방안이 현실화된 이후에 그러한 상황변화의 조건 아래서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을 논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주한미군문제를 의제로 다루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한 북한의 제안에 대해서는 △ 4자회담의 운영과정에서 북미관계의 진전을 보장함으로써 주한미군문제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을 것을 양해하도록 하고, △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한반도 평화체제가 보장된다면 주한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화될 것임을 제시해서 쟁점을 완화시켜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의 방향

동북아에서 평화체제를 형성하다는 것은 이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실존하고 있는 여섯 개 나라들, 일, 중, 미, 러, 남북한이 이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관련된 문제들을 무력에 의존하지 않고 정치외교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적인 틀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북한, 러시아와 북한, 한국과 미국, 미국과 일본 등 쌍무적 동맹관계를 동북아 다자안보체제와 조화시키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한다. 이삼성 교수는 “쌍무적 동맹관계의 정치적 틀은 유지시키되, 그것들이 내포한 군사 중심적 성격들을 최소화해나가는 데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유사시 일방을 지원하는 자동개입의 형태를 띠는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둘째, 쌍무적 동맹체제 안에서 강대국가의 군사기지 사용이나 군사력의 전진배치 수준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러한 최소한의 조치들이 이루어질 때 다자적 틀과 쌍무적 동맹체제가 공존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인 다자간 대화와 협상을 추구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동북아 다자안보틀을 통해서 다자간 대화와 협상의 구조가 확고해지는 과정에서 쌍무적 동맹체제의 역할은 변화해갈 것이다.

유럽식 신뢰구축 장치와 한반도

그 동안 한국정부는 유럽식신뢰구축장치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것을 선호해왔다. 즉 2차대전 이후에 조성된 국제정치적 현실을 인정한 방안을 한반도에 적용하여, 한미군사동맹체제가 보장되는 남북관계를 선호했던 것이다. 따라서 효율적인 군축협상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현실을 인정하는 정치적 신뢰구축이 필요하고, 이는 군사면에서의 관계개선으로 발전한다는 논리를 전개해왔다. 이러한 논리는 통일보다는 현시점에서 평화공존을 강조하는 김대중정부의 논리로 이어지고 있고, 국내외에서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엄청난 군사력의 현수준을 그냥 두고 유럽식 모델을 통한 신뢰구축을 강조하는 것에는 반대하고 있다. 북한의 이형철 군축연구소 연구실장은 “엄청난 군사력으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에서 무력의 수준은 그냥 두고 부차적인 이른바 ‘신뢰구축’을 추진하는 것은 합당치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유럽에서 신뢰구축장치가 가지는 의미를 애써 약화시킬 필요도 없고 아울러 한반도에서 신뢰구축의 의의를 부정할 필요도 없다. 중요한 것은 “유럽에서 군축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가”라는 사실인식과 “한반도에 타당한 신뢰구축의 내용이 무엇인가”라는 판단이다.

유럽에서 군축이 급진전된 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신뢰구축장치가 선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 충분성’에 입각한 고르바초프의 일방적 감축과 광범위한 유럽인들이 참여한 반핵운동이다. 1975년 헬싱키에서 신뢰구축장치를 마련하였으나 유럽은 다시 냉전을 맞이하였고, 1975년 신뢰구축장치가 마련되기 이전에도 간헐적인 군축협상이 존재하였던 사실은 유럽군축이 신뢰구축이 선행되었기 때문이라는 논리의 허구성을 보여준다.

또한 1980년대 초에 유럽에 퍼싱2 미사일과 SS-20 미사일이 배치되었을 때, 서독의 슈미트 수상은 동독의 호네커 수상을 방문해서 독일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유럽의 정치적 지도력이 유럽에서 군축협상이 성공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이다.

한반도에서도 상대방을 참략할 의사가 없음을 약속하고 이에 따라 병력과 무기를 감축하는 것이 신뢰구축의 길이며 군축의 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과 군축의 핵심고리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는 길이다. 남북기본합의서에서는 불가침과 군축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신뢰구축과 군축의 첫걸음은 남북합의서를 이행하기 위한 남북대화를 시작하는 것이다. ■

The Task for Peace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 and Establishment of Alternative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Kim Chang-Soo

/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1. The Proposition for Peace Settlement in Korean peninsula

It is evident the reason why United States has to take part in as the party involved.

U.S. is the country which entered into a war and the party concerned in keeping of Cease-Fire Agreement and its system. By the ROK-U.S. Mutual Defense Agreement, U.S. made a direct party involved in military conflicts in Korean peninsula, stationing U.S. troops in South Korea. Besides, it is the driving force of army reinforcement in South Korea such as acquisition of up-to-date weapons and practiced a great size of military drill with Korean army regularly. Besides, U.S. still obtains the right of operational responsibility over Korean army in war times. In order to secure the real peace in Korean peninsula, therefore, U.S. should participate in the party responsible in Peace Agreement. Then, it will be one of success factor in Four Party Meeting to admit the stance of party involved to U.S. government, which South Korean and U.S. government have been denying.

<Proposition 1> Conclude a Peace Treaty through Three Party Direct Meeting between both

Koreas and U.S.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n government and U.S. to confirm the participation of U.S. as the direct party of Peace Treaty in order to draw North Korea to Four Party Talk. It is the prerequisite of effective Four Party Talk which enables to settle peace conflicts practically. It needs full consideration to suggest Three Party Talk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U.S. if South Korean governments wants to advance the process of Peace Treaty in more flexible way.

<Proposition 2> The operating way of Four Party Talk

If we consider the reunification issue in Korean peninsula has international characters as well as domestic ones, it is a critical project to warm the present situation of tight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U.S. and North Korea in order to develop atmosphere of reunification. In other words, it is necessary to make a dual system which processes North-South Talk and U.S.-North Korea Talk at the same time in the frame of Four Party Meeting. That is to found a institutional device to increase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between North Korea and U.S.

The operational way and process of Four Party Meeting can be divided into followings.

Step 1

General agreement on agenda of Four Party Meeting and discussion of operating ways and processes. By the suggestion of Three Party Talk between both Korea and U.S., it is possible to persuade North Korea into agreeing the Collective agenda.

Step 2

Dual operating system of South-North Talk and North-U.S. Talk.

In North Korea-U.S. Talk, it is carried out as a way of including North-U.S. Generals Meeting, which was out of Four Party Talk before.

In South-North Talk, it will address the specific plans to increase military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issue of establishing Peace System in Korean peninsula described in the fifth article of South-North Mutual Basic Agreement, A nonaggression party treaty appointed in the second chapter of South-North Mutual Basic Agreement

Step 3

The Contraction of Peace Treaty by way of Three Party Meeting and opening 3+1 Meeting with China as a guarantee. In the Three Party Meeting, it will cover and further the outcome of meeting of second step, concluding it as agreement of Peace Treaty.

Step 4

By above-mentioned three steps, it will advance to 4+2 Meeting with the participation of Japan and Russia, thus in the long term establishing Security system for peace in Northeast Asia.

<Proposition 3> The issue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The issu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has to be considered flexibly in the process of Four Party Meeting. If we reckon with the fact North Korea was approaching to the issues of U.S. Army before the opening of the first main Four Party Meeting in a practical way, this issue can be directed differently according to situations upon the settling of fundamental in North Korea-U.S. Talk. The meaning and rol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as a checking power toward North Korea will be different clearly if there is a official negotiation and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Then, it is not a premise of processing Four Party Talk to include the issue in agenda. After the plans for settling Peace in Korean peninsula is put into realization, the stance and role of U.S. Armed Forces in Korea will be discussed under those changes of circumstances.

Thus, to North Korea suggestion requiring the issue to include in agenda, ◎ we have to make North Korea soften on that issue by securing the advancement of North Korea-U.S. relationship during the Four Party Talk process ◎ we would be able to persuade North Korea into understanding that with Peace Treaty, the stance and role of U.S. Armed Forces will suffer considerable change.

2. The direction of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The establishment of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indicates to make a institutional framework which makes it possible for six countries- Japan, China, U.S., Russia, both Koreas -to solve issues

involved with peace and security in this region by political and diplomatic negotiations and talks, without relying on military forces.

In order to found Peace system in Northeast Asia, there are several practical obstacles, one of which is to harmonize bilateral alliance relationship such as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between Russia and North Korea, between South Korea and U.S., between U.S. and Japan with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in Northeast Asia.

Professor Lee Sam-sung remarks;

We need to find a clue of solution to reduce the characteristics of military centered bilateral relationship, keeping its political framework.

For realizing this objective: Firstly, we need to dispose the auto invasion factor supporting one party in urgencies. Secondly, the size of stationing armed forces in front or the occupation of armed base by major powers have to be reduced into least possible level in bilateral alliance system.

After these least possible measures are taken, it is possible to further multilateral negotiations and talks in the coexistence of multilateral framework and bilateral alliance relationship. The part of bilateral alliance will change during the process of solidification of multilateral negotiations.

3. The device of European way of trust-seeking and Korean peninsula

For all those years, South Korean government has advocated to introduce the device of European trust-seeking in Korean peninsula. To be more specific, it is to accept the way countries' admittance of international political reality since World War II in Europe, favoring South-North relationship which secures ROK-U.S. military alliance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effective disarmament conference to increase political trust noticing the reality of each other, and this will lead to improve mutual relationship in military sector. This reasoning has been succeeded in the logic of Kim Dae-Jung Administration, which weighing peaceful coexistence at present. It has gained considerable supporters inside and outside the country as well.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s against emphasizing the European model of trust-seeking, which let the tremendous military forces be as it is. The Chief of Research institute for disarmament in North Korea, Lee Hyung-chul argues, "It is not reasonable to seek so called 'trust-molding' with no measures dealing with the level of forces, at times of heightened military

Reasons for abolishment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Kim Sung-Man

/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1. The freedom of ideology and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freedom of ideology forms ideology and maintain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signifies it. The true principle of Nationalism starts by securing the freedom of ideology. Nationalism is based on ideology and thoughts, relativity of an opinion and securing the freedom of ideology in which deciding and carrying out a principle by the majority is the principle of politics. The security of the freedom of ideology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judging the state of Nationalism.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been through eight amendments. During these amendments, the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speech and press, assembly and society and the freedom of arts and science have been consistently unchanged and have been secured by the foundations of the people. The freedom of ideology has not been stipulated but you would have to agree that the freedom of conscience includes the freedom of ideology. How can the freedom of conscience be secured if there was to be freedom for thinking but none for expressing this freedom?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basic principle of Nationalism, thus is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secures conscience and is radically suppressing the freedom of ideology. Just because an ideology, expression or an act is the same or similar to the ones of North Korea, people have been punished and are still being punished for this. Any document or writing which contains any

word or expressions agreeing to the ones of the North Korea are being punished and anyone who agrees on these explanations are also being punished.

As long as this law exists, people will feel hatred upon anyone who has these thought or any similar thoughts and will be made to feel disgusted in order to be in the 'secured zone'. If not, they can not fulfill the duty of being a democratic citizen which has been stated by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is the model of a 'bad' law which infringe directly upon the freedom of conscience and ideology.

2. The problems of the National Security Law

The 'article 13 clause 1' from the constitutional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tates that by the law an act can not be punished for not organizing a crime. This is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is the main principle of the freedom of the consitutional law itself. However the National Security Law not having clearly stated the contents of the crime, can still be used to punish people. Anyone caught praising , encouraging, aligning or in any other way to benefit anti-national organization can be punished for maximum of 7 years in prison. The texts below lists the following:

Article 7

Clause 1: Anyone taking part in an anti-national organization or caught praising, encouraging, aligning or in any other way to benefit the anti-national organization to the person in charge will face maximum of 7 years in prison.

Clause 2: Anyone who praise, encourage, align foreign communist activity or in any other way to benefit the anti-national organization will face the same charge as Clause 1.

Clause 4: Anyone who is a part of a stipulated organization as stated in Clause 3 face minimum of 2 years in prison if they spread any false statement which could disturb the order of the society.

Article 8

Clause 1: Anyone, knowing that it would benefit the anti-national organization and still continue to meet, communicate or in any other way contact with its members will face maximum of 10 years in prison.

Article 9

제한한다. 남북갈등은 사회전반에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 관용, 투명성, 인간 안보, 생태보전, 평등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후퇴시킴으로 사회발전을 가로막고 국제사회의 신뢰와 존경을 상실하게 만든다. 국제사회의 신용도 하락과 전쟁위험은 해외 투자자들의 발길을 막거나 투자를 불안정하게 만들어 경제 위기의 단초를 제공한다. 남북갈등으로 인한 이 같은 소모전은 결국 국가경쟁력의 상실로 이어지고 중국에는 민족 생존을 위협받게 만든다. 오늘 남북한이 겪고 있는 슬픈 현실이다. 냉전체제가 낳는 폐해는 이렇게 엄청나다.

3) 분단상황은 이땅에 군사주의 문화를 형성, 지속시킴으로써 사회발전과 평화를 가로막고 있다. 군사주의 문화는 '타자를 지배하는 힘'의 이데올로기며 남성의 힘에 중심을 둔 제도다. 군사주의 문화는 각종 위계질서를 옹호하고, 남성의 힘을 찬양하게 만들며 남성을 여성보다 우위에 두게 하고 엄격한 성 역할 구분을 받아드리도록 부추긴다. 군사화된 사회에서는 '힘이 곧 정의'이고 사회는 지배-종속의 관계방식을 토대로 하며 그같은 관계방식이 개개인의 관계로 까지 파급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받아드리게 한다. 이러한 위계질서(가부장제 질서)는 억압의 한 형태로 이해되기 보다 사회안정을 위한 필수 조건으로 간주된다. 이와같이 군사주의는 가부장제와 맞물려 기능하면서 가부장제 제거 노력을 방해한다. 또한 군사주의 문화는 타자를 적으로 규정하고, 폭력과 무력사용을 옹호하며, 폭력을 분쟁해결의 합법적 수단으로 옹호한다. 따라서 군사주의는 수많은 사회폭력들이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며 폭력을 가정과 일반 관계망까지 확장시키는 기제로 작동한다. 모든 한국 성인남성들에게 부과하는 의무적 군복무는 폭력적 군사문화를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제도적 장치다. 우리사회를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가정폭력, 성폭력, 학교폭력, 왕따문화는 이런 군사주의 문화의 여러 얼굴들이다. 뿐만 아니라 군사주의 문화는 속전속결 문화(빨리 빨리 문화)와 획일주의 문화를 장려, 사회전반의 인내심을 약화시키고 다양성에 대한 관용의 정신을 약화시킨다. 합리적 토론이나, 타협, 협상 등, 평화적 갈등해결에 필요한 덕목의 성장도 막는다. 사회발전을 막는 냉전체제의 폐해들이다.

2. 냉전청산과 평화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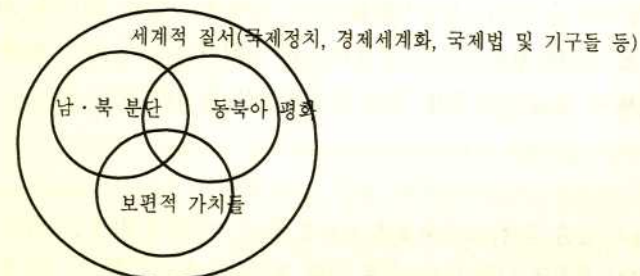
위사실만 보더라도 냉전청산은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물론 역대 정권들은 냉전청산을 위한 제반 정책을 시도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반도 냉전구조는 늘 그대로였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전 시대와는 구별되는 정치적 담론과 정책들을 내놓았지만 서해사태는 일시에 이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만들었다. 이를 계기로 나타난 햇볕정책에 대한 총공세와 이에 따른 서해사태 대응방식은 국민의 냉전적 사고 앞에서 정치적 언설이나 결단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보여 주었다. 냉전구조 해체작업이 정치적 담론이나 행위 또는 결단만으로는 완결되기 어렵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우리사회를 무겁게 휘감고 있는 냉전의식에 대한 수정작업이 선행되거나 병행되지 않고서는 냉전해소를 위한 어떤 정치적 결단도 다시 제자리로 환원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역사적 체험이다.

평화적 시도를 무력화 시키는 것은 냉전의식만이 아니다. 민족문제에 대한 대중의 무관심도 문제다. 98년말 민화협과 중앙일보가 실시한 국민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4%가 남북기본합의서의 취지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했다. 자기중심적이고 보다 안정적 상태에 집착하는 전후세대들의 태도, 그리고 일상적 삶을 꾸리느라 여념이 없는 대중들은 남북문제에 관심이 없고 그래서 잘 모른다. 이런 태도는 현상유지, 분단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하고 냉전적 목소리에도 쉽게 휘말린다. 이같은 무관심 그리고 잘 모르는 상태는 냉전의식과 함께 냉전체제 해체에 커다란 걸림돌이다. 현 체제를 변경시키려는 어떤 의지도 갖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냉전구조를 떠받치는 뼈대다.

4) 따라서 냉전구조를 해체하기 위한 노력은 국민을 냉전의식과 무관심에서 불러내 민족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만들고 평화에 대한 사회적 의지를 갖게 하는 교육에 필수적으로 투입되어야 한다. 이른바 평화교육이 절대적이다. 한국인들에게 통일 의지, 평화 의지가 없는 한 어떤 평화노력도 현실이 되지 못할 것이다. 평화가 가장 절실한 현실에서 평화교육이 필수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황은 냉전체제가 얼마나 굳건하기를 반영하는 것이다. 평화교육은 이제 말하기, 쓰기, 듣기 과목과 똑같이 모든 교육영역에서 다뤄져야 한다.

냉전 청산에 대한 의지나 평화의지를 갖게 하는 평화교육은 현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서 출발하면 좋을 것이다. 우선 냉전체제로 인한 개인적, 민족적 폐해의 심각성, 분단의 역사적 배경, 분단과 동북아 평화와의 관련성, 분단과 세계정치역학, 북한의 사상과 현실 이해, 등이 평화교육의 주요 내용으로 학습되고 토론될 때라야 사회는 냉전체제 해체 준비를 갖추기 시작할 것이다. 인류의 보편적 가치들을 학습하는 일도 병행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오랜 군사주의 독재 체제와 남북대치상황은 인권, 정의, 평화, 민주주의, 합리성, 관용, 투명성, 인간 안보, 생태보전, 협력, 평화, 화해, 약자에 대한 배려, 보살핌, 인도주의 등과 같은 보편적 가치를 훈련할 기회를 박탈해 왔다. 국민이 보편적 가치를 중심가치로 받아드릴 때 사회는 평화에 대한 의지가 보다 확고해질 것이다. 사회전체가 비방, 불신, 편협성, 적대성, 의심, 속전 속결, 대결, 예단, 복수, 혐오, 원수, 경쟁 등 우리 사회에 익숙한 냉전적 화두들을 보편적 가치들로 대체시키고자 할 때 냉전체제는 균열을 보이기 시작할 것이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 한반도의 갈등과 분쟁을 평화적으로 관리하는 일은 현실적으로 매우 시급하다. 이것은 매우 특별한 분쟁해결 능력을 요구한다. 유니세프의 대표 제임스 그랜트(James Grant, 1994)는 갈등을 관리하고 편협성(intolerance)을 방지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관건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만일 갈등 당사자들이 자신들에게 솔직해질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그리고 그들이 좋은 해결을 도출하겠다는 의지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갈등을 관리할(win/win) 지식과 기술을 가진다면 문제는 보다 평화롭게 조기에 풀릴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평화에 관한 풍부한 지식과 기술은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면할 여유를 제공하며 갈등을 창조적으로 평화롭게 해결할 힘을 제공한다. 또한 갈등해소 능력 훈련은 갈등이 나쁜 것만이 아니며 방지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하나의 도전이고 발전의 기회도 된다는 적극적인 태도를 키운다. 이런 점에서 국제사회의 평화교육은 갈등해소 교육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추세다¹⁾

갈등해소 능력을 키우는 교육은 한편으로는 국제사회의 지혜와 기술을 배우는데서,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역사적 체험을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다. 평화교육은 남북갈등을 비롯한 우리의 일상적 체험에 대한 반성적 성찰 능력을 확대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때 중요한 것은 관점이다. 우리는 앞에서 냉전의식 대신 인류의 보편적 가치 교육을 얘기한 바 있다. 따라서 우리의 성찰은 냉전적 관점이 아닌 평화적 관점에서 시작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남북 모두가 상대를 이기려고 다투거나, 상대를 굴복시키기 위해 강제력을 사용할 때 갈등이 오히려 더 강화되거나 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체험했다. 우리는 남북이 서로 다른 이념이나 체제를 상호 관용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풀리지 않는 현실을 겪고 있다. 이제 우리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 남북한이 서로 다른 이념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 상호의 자존심과 감정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 상호 처한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상호에게 이익이 되는 해결을 공동으로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것 등을 미약하게나마 인식하기 시작했다. 남북은 쉽게 적대적 감정을 드러내고 문제상황에 이 감정을 개입시킨다는 것, 그리고 감정의 개입은 갈등을 훨씬 악화시킨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남북이 감정을 관리하는 방법과 합리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익힐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갖게 되었다.

이렇게 자신의 체험을 성찰하고 나면 우리는 그에 필요한 기술을 찾아 나설 수 있다. 이때 국제사회가 개발한 갈등해소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적극적으로 듣는 기술, 합리적 의사소통에 필요한 기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는 기술, 승/승(win/win) 파라다임의 기술, 등을 평화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정보사회를 맞아 컴퓨터 기술을 배워야 생존하듯이 갈등구조에 사는 우리는 갈등 해소능력과 평화능력을 적극적으로 배워나가지 않으면 평화를 누릴 수 없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과목이 되어야 한다.

1) 갈등, 폭력, 평화 등의 성격과 원인, 갈등의 상승 경로, 갈등해결에 필요한 중심 덕목들과 기본원칙들(상대방에 대한 존중, 관용, 협력, 상대의 감정과 동기에 대한 이해, 다름 인정 등), 갈등을 해결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에 관한 지식들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6) 세계 평화운동의 흐름과 NGO의 활동을 평화교육 내용으로 다뤄야 한다. 최근 일본의 사카모토 요시카즈 교수(동경대학교 명예교수)는 '한국 국민들이 정치적인 의식측면에서는 남북분단의 비극 때문인지 국내문제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있다고 말하고 단지 한국의 입장에서만 세계를 봐서는 안된다'고 충고한 바 있다. 그의 말대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냉전의식과 냉전구조를 청산하기 위해서 세계평화운동으로부터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그들과의 연대 능력을 키우면서 우리의 사고지평과 활동공간을 넓힐 필요가 있다. 20세기 세계냉전질서 해체의 배경에는 세계 시민사회의 거대한 평화운동이 있었다. 1999년 5월에는 헤이그에서 세계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회의를 가졌다. '21세기 전쟁의 불법화와 평화문화 형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는 1)군축과 인간안보 2)폭력적 갈등의 방지, 해소, 전환, 3)국제인도주의 법과 인권법 그리고 국제기구들, 4)전쟁의 원인/평화문화 등의 구체적 주제들을 토론했다. 이 주제들은 모두 한반도 냉전 구조와 맞물려 있는 주제들이다. 따라서 이 주제들은 우리 평화교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적극 수용되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활동과 역할도 평화교육의 주요 주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오늘날 시민사회는 국내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관계를 민주화하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들과 시민들은 대중의 요구를 국가적 또는 국제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으며 신외교(new diplomacy)를 개척해 가고 있다. 헤이그 평화회의는 21세기 국제적 또는 초국가적으로 군축과 안보협상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을 확인했다. 다음 세기에는 국가의 역할이 점차 축소되고 국제시장의 역할과 국경을 뛰어넘는 시민단체의 역할이 더 크게 부상할 것이라고 한다. 또한 시민사회, 정부, 국제적 기구들이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는 다자간 외교(Multi-Track Diplomacy)가 주류를 이룰 것이라고 한다. 이런 점에서 평화교육은 시민사회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개척해 나가야 할 것이다.

3. 제안

7)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에 평화교육을

지난 5월에 열린 헤이그 세계 평화회의는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의 하나로 전 세계의 모든 학교가 평화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한다는 것을 채택했다. 이를 위한 주요 캠페인으로는 1) 초중고 학교와 교사교육에 평화교육을 의무화하는 것, 2) 대학에서 인권교육과 평화교육을 기본과목에 포함시키고 법대에서 국제법을 기본과목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것 등을 설정했다. 유엔은 1997년 총회에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받아 2000년을 세계평화 문화의 해(1999년 9월 14일 부터 시작)로 선포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2001년부터 2010년 까지 10년을 평화의 문화와 세계 어린이들을 위한 비폭력 10년으로 선포했다. 이를 계기로 시민단체들은 헤이그 안을 한국정부와 대학들에 제시하고 이것이 현실화되는 캠페인을 벌여야 할 것이다. 유엔의 평화문화 10년을 평화교육 확산의 계기로 적극 활용하는 캠페인도 벌여 나갈 수 있을 것이다.

make any progress. Under this yoke, the rights of 10 million dispersed families are cruelly abused. This is one of the worst wounds of the Cold War system.

The Cold War structure that creates hostility to each other is greatly wasting the nations power by causing ceaseless conflict and dispute. First of all, all the national budget that can be used for production and unemployment aid, welfare is wasted as the defense budget.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the North and South Korean young men creates limitations to the democratic way of thinking, the promotion of creativity and the productive activities. Conflict of the North and the South goes against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d causes to retrograde the general value system, such as human rights, justice, peace, democracy, tolerance, transparency, human security, life preservation and equality, and it also causes loss of trust and respect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The downfall of trust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threat of war gives a reason for economic crisis by discouraging foreign investment or causing lack of stability for investments. Such waste, from the conflict, causes the loss of nation's competitive power and threatens the survival of the nation at last.

3)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has been the obstacle for peace and societal development as it has established and sustained the culture of militarism. The culture of militarism is the system centered by the power of men and the ideology of "power of dominating others". It supports the ranking system, causes to praise the power of men, puts men over women and incites to accept the definite distinction of sex. In the militarized society, "power is justice" and the society is based on domination-subordination relationship, which effects the life style of individuals. Such ranking(patriarchal) system is not understood as a form of oppression, but as a requirement for the stability of the society. So, the militarism works with patriarchy and interferes with efforts to demolish patriarchy. Also, it defines others as enemies, supports violence and use of weapons, and it supports violence as a legal means of conflict resolution. Thus, militarism is a basis for so many cases of social violence and extends violence to families and other relationships.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required for all Korean male adults is the systematic tool to train them the culture of militarism. Many negatives cultures currently existing, such as family violence, sexual abuse and violence in schools, are the faces of the culture of militarism. Furthermore, the militarism culture promotes quickness and standardization, which weakens patience and tolerance to diversity. It also prevents development of the elements necessary for peaceful

conflict resolution, including rational discussion, compromise and negotiation. These are the evil of the Cold War system that prevents the development of the socie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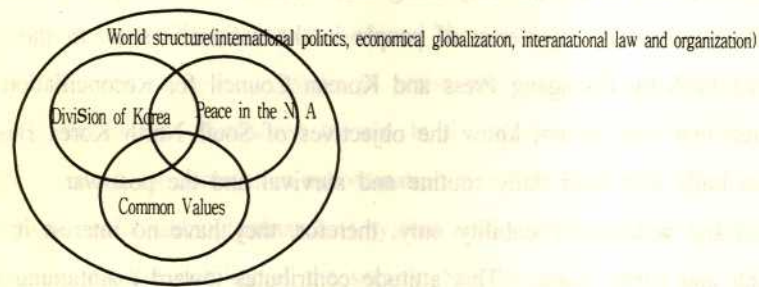
2. Ending the Cold War and Peace Education

With the above facts alone, we must admit the absolute need for clearing up the Cold War and it's our assignment which cannot be put off any longer. Of course, it is true that the past administrations have had attempted policies in order to end the Cold War. However, no progress have been made and it remained the same way. The new administration have laid down the political discourses and policies distinctive from the past ones, but made some doubts because of the recent serious situation with North Korea occurred in the west sea. Through the situation, the total strategies of "Sunshine Policy" and its countermove to the situation have been proven ineffective to the viewpoint of cold war that the people have. It shows the fact that it's impossible to accomplish the goal of ending the cold war only by political discourses or actions. From our historical experience we know that without a change of the way of thinking on the cold war, there won't be any progress made regardless of any kind of political decision.

The way of thinking on the cold war is not the only thing that weakens the attempts of peace building. The problem lies also on the lack of interest of people in the national issues. In the survey conducted at the end of 1998 by Chungang Press and Korean Council for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84% answered that they do not know the objectives of South-North Korea Basic Agreement. Regular people are busy with their daily routine and survival and the post-war generation is very self-centered and seeking for stability only, therefor, they have no interest in the situation between the South and North Korea. This attitude contributes toward maintaining the situation and dividing the system as well as getting involved in the "Cold War" voice. This kind of ignorance(neglection) and situation along with consciousness of the cold war is the obstacle we must overcome. This is because there's no will to change the current system. This is the vital source that supports the structure of the cold war.

4) Therefore, the effort to remove the cold war structure causes the people to bring out their ignorance and consciousness in order to gain interest about the nation's problems and the will for peace. Peace education is absolute. If Koreans do not have the will for peace and unification than

any attempt for peace will not be of any use. As peace is the most vital issue in current situation, the fact that peace education has not been placed as a required subject shows how the cold war system has made a starting impact on the situation. Peace education should now be come a required subject just like writing and reading. The will to clear the cold war and the will for peace should start from peace education by providing the accurate information. First, any personal bad images, historical background, relationship between division and peace in Northeast Asia, division and world politic studies, understanding of North Korea's reality and ideology and so on should be the main contents of peace education. These should be learned and discussed properly in order for the society to prepare for the clearance of the cold war system. The Korean society's long dictatorship of the military and the right, justice, peace, democracy, rationality, liberality, clarity, securing human rights, protecting the environment, cooperation, forgiving, yielding to the weak and humanism have been deprived of their values. When the people accept the general value as their main value then the will for peace in this society will become firm and strong. Topics such as hatred, revenge and competition are the main concerns under this cold war system and these arise when they try to replace this with general values. The following diagram represents the contents of this passage.



5) The resolving of conflict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dealing the issue peacefully is very urgent. This requires a very special conflict resolution skills. James Grant, the representative of Unicef claimed once that education is the key point in dealing with the conflicts and preventing intolerance. If the people involved in this conflict gets the courage to be honest with themselves, the will to solve the problems, learn to cope with the knowledge and skill, the problem can be easily solved. Abundant knowledge and skill in peace can provide extra room when faced with the problem and provides strength to peacefully and creatively solve the problem. Also, in having the

skill of resolving conflicts, the conflict is not bad it can prevent and solve the problem as well as providing a new challenge and a chance to improve. From this, the international society focuses resolving conflict studies on peace education.

Education which teaches students the skill of resolving conflicts can start from the skill and wisdom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On the other hand it can start from reflecting our own historical experiences. Peace education is also learning and reflecting from our own daily experiences such as the North and South conflict. The important thing is the point of view which you look at. We have talked about teaching general education for the population instead of teaching them consciousness on cold war. Therefore our reflections should start with a peaceful point of view not with a cold war point of view.

We have experienced that when one tries to suppress the other or tries to compete the conflict becomes worse. We are faced with the reality of the two nations not approving of each others ideology or system which leads to conflicts. We have now come to realize that in order to make peace we have to learn to respect each others ideology to understand each others positions and as one find the solution in which it can benefit the nation as one community. We have also realized that the North and South easily show their emotions and place their emotions in situations makes the conflict even worse. Therefore learning to deal with each others emotion and to come up with a more ideal method in communication.

After reflecting on one's own experience, we can easily find the skills he needs. Help is also available from the knowledge and skill about resolving conflict developed by the international society.

We can use some skills effectively in peace education, skills such as active listening, rational communication skills, skills in expressing one's own emotions and understanding other's emotions, and skills of win-win paradigm. Just as we have to acquire computer skills in order to survive in the ag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we won't be able to establish peace without actively learning how to resolve conflicts and build peace. In this sense, peace education is not a choice, but it's a survival requirement.

The flow of the worldwide peace movement and NGOs current activities should be the content of peace education. Recently, the Tokyo University Professor, Sakamoto Yoshikaze stated "Koreans dwell in the problems within the nation only may be due to the tragedy of division of the nation. However, they should not look at the World with their viewpoint only". Just like his

statement, we should expand the area of activities by learning from the experiences of international peace movement and developing solidarity with them in order to end the cold war structure and its way of thinking. We can take a look at some issues had been discussed at a recent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adapt them into future peace education. Those issues were: 1) disarmament and human security, 2) prevention of violent disputes, 3)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human rights law,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4) causes of war and culture of peace.

3. Suggestions

7) Peace education in school and social educational system

In the Hague Peace Conference that was held in this May, 10 principles were selected to be mandatorily implemented in all schools worldwide for the justice of the World. The main campaigns are ; 1) making peace education mandatory in the training programs for the teachers of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2) including human rights education and peace education as the requirement courses in colleges, and international law as one of the basic courses in law schools.

8) Utilizing Media as tools for peace education

The effect of the media in the society is increasing every day. If media chooses to broadcast conflictual situations in a positive(non-provocative) and objective way, the media will be used for bringing peace instead of promoting war, which can be the most effective of peace education. The civil society should play the role to demand and promote the media to be used as tools for peace education.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대북지원운동에 대한 성과와 과제

도 각

/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지난 8-90년대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었던 화두중 하나가 '통일'일 것이다. 분단된 조국의 영토의 미의 통일뿐만 아니라 반세기 넘게 진행되어온 감정과 원한의 골을 어떻게 극복하고 21세기 통일시대를 맞아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여기에 정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시킨 것이 아무래도 대북지원운동이라 생각한다.

93-96년까지 대규모로 진행되어온 북한의 자연재해는 그동안 북한 사회의 모순을 극명화시키면서 식량위기라는 최대의 어려움으로 내몰았다. 여기에 에너지와 외화난을 포함한 경제난은 북한사회의 복구가가능성까지 의심하도록 만들었다. 96년이후 북한사회의 어려움과 식량위기가 전해지며 전세계의 국가와 비정부기구에서 구호물자가 전달되었다. 남한에서는 종교계와 시민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북지원을 위한 여론호소와 동포돕기모금운동을 함께 전개하였다. 또한 이들은 남한정부와 대기업이 나서지 않으면 해결하기 어렵다는 판단으로 '정부의 대북지원촉구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남한의 각계각층에서부터 전달되어온 금품과 물자가 모아졌고, 또한 북한동포가 우리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와 피를 나눈 형제고, 한민족이라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모습은 김영삼정권시절 대북지원을 제한하는 조치에도 불구하고 각 민간단체들이 자체적으로 모금하고 이를 북한에 직접 전달하면서 김영삼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허구성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이과정에서 남북이 화합하고 하나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대북지원은 초기에 식량지원에서 시작하여 의약품, 겨울나기위한 용품, 그리고 올 상반기에 진행되어온 비료보내기와 옥수수심기, 평화의 숲 가꾸기까지 다양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당장

먹을 것이 없어 굶어죽고 있다는 소식에 옥수수과 밀가루를 전달하였고, 의약품이 없어 치료를 못해 사망자가 늘어난다는 보도에 의약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경제난과 식량위기가 정기적이고 구조적이라는 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고기잡는 법을 알려줘야 한다'는 여론이 설득력을 얻게 되었다. 특히 98년 하반기를 거치며 대북지원단체를 중심으로 비료보내기를 통해 지력(地力)을 살리고 식량을 증산하도록 지원하는 길이 서로를 돕는 길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올 상반기에는 각종 민간단체와 적십자사, 그리고 정부가 나서서 약 25만톤 정도의 비료가 지원될 걸로 예상했지만 서해교전사태이후 정부의 지원도 중단된 상태이고 민간역시 뚜렷하게 전달이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중요한 정부당국자간 대화채널도 중단된 상태로 알려져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한편 '평화의 숲 가꾸기 운동'이나 옥수수재단의 '슈퍼옥수수심기'운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보다는 중장기적인 계획과 전망을 가지고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런 대북지원운동의 성과를 살펴보자

먼저 가장 큰 것은 한반도 주변정세와 무관하게 남북의 민간이 함께 사는 길을 찾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남북이 반세기넘게 분단을 거치면서 대결과 해묵은 감정을 가졌지만 대북지원사업이 범국민적인 운동으로 승화되면서 서로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민족의 화합과 하나됨을 염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다음으로 97년 IMF사태이후 남한도 어려움에 처하면서 남북이 한 뿌리이고 분단으로 기인하여 두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를 극복하는데도 두 사회의 협력과 화합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다. 사실 IMF사태이후 남쪽에서도 실업자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대한 여론이 일어서 이에 대한 재원으로 남북군비축소를 통해 군비를 평화와 복지비용으로 전환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이 제안되었다. 결국 남북의 각각의 위기는 원인과 진행상황은 다르지만 분단과 대결에서 기인하였는 지적인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각계에서 여러 통일사업을 진행했지만 대중은 항상 관객의 입장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난 결과였다. 그런데 여기에 반해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대북지원 운동을 통해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통일일꾼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자신이 낸 성금이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래서 얼마나 상황이 나아졌는지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의 화합과 통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다.

그렇지만 문제점도 여러 곳에서 노출되었다. 문제와 함께 과제를 짚어보자

먼저 북한의 어려움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라면 이에 대한 지원대책도 장기적이고 종합적이어야 한다. 민간단체의 대북지원이 초기 식량지원에서 최근에 비료지원으로 전환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북한농업지원의 종합적인 차원에서 전개가 되어야 할 것이다. 남한의 잉여농기구와 비료, 종자, 그리고 농업기술까지 식량을 자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지원형태를 보면 대부분 각 종교간, 계층간, 지역별로 지정기탁이 되어왔는데,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민간에서도 남북이 신뢰가 전제된다면 남북간 각 지역·조직간 자매결연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 민간단체간 네트워크형성이 미진하다보니 스스로 알아서 각개약진하는 듯한 양상이다. 물론 민간단체에서 지원품목과 수량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정보교환을 통해서 최적의 시기와 장소에 필요한 품목을 전달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세 번째로 대북지원운동을 주도한 종교계에서 과도하게 자신의 교세확장에 매몰되었던 점을 지적하고 싶다. 대북지원초기에 종교인의 용기와 양심으로 대국민여론을 얻을 수 있었고, 지원액에 있어서도 경의를 표한다. 그러나 어떤 경우는 본말이 전도되어 선교목적으로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여 지원한 경우도 있어 자칫 물의를 빚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동정이나 사랑, 자비심에서 시작하였다더라도 지속적인 대북지원을 통해 남북주민의 동질성을 확보하고 연북연남(戀北戀南)의식을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통일의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자세도 지적하고자 한다.

김대중 정부들어 확실히 남북관계에 대한 정책은 이전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함에도 대북지원에 대한 상호주의를 고집하는 것은 아쉬움이 든다. 이미 남북간 체제대결은 끝났다고 본다. 이제는 조금 더 나은 큰 형의 지혜와 배려가 필요한 때이다. 그 동안 자존심하나로 버텨온 북한사회에 대해 남측이 지원한 데 대한 응분의 요구를 요청할 경우 북측의 선택의 폭은 사실 넓지 않다. 오히려 그럴수록 남한의 사회통합력을 바탕으로 정부차원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정부간 신뢰를 확보해야 한다.

북한사회의 어려움이 알려지고 남한에서 범국민적으로 대북지원운동이 벌어진 것도 벌써 4년이 되었다. 민간부문의 대북지원은 국민적인 여론을 조성한데는 많은 기여를 하였지만 실제적인 지원액을 보면 턱없이 모자란다. 결국 정부와 대기업, 언론이 나서야 한다는데 이견은 없다. 단순히 정부정책이나 당국자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기를 기대하지만, 이 변화에도 역시 전제조건은 있다. 바로 국민여론이다. 여기에 바로 대북지원활동을 하는 민간단체들의 존재이유가 있는 것 같다. 민간단체와 회원들의 노력의 바탕위에 정부의 대규모지원을 통해 남북사이에 화합과 평화를 가져오고 장기적인 통일운동으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다. ■

The achievement and project of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Do Kac

/ Buddhist Committee for Concord of Nation

Since 80's, It was 'reunification' that has been one of the hottest themes of Korean society. It was an important issue to find ways of overcoming adverse relationship and of preparing reunification period of 21st centuries as well as to reunite parted country. Upon this recognition, it was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that really built the sympathizing emotion to help.

The natural calamities of North Korea, which had devastated North Korean overwhelmingly from 1993 to 1996 clearly revealed the contradiction of society, driving it to the most difficult situation, food crisis. Furthermore, economic crisis including energy deprivation and foreign currency deficiency was enough to get suspicion from outer world that whether North Korean society would get over or not. Since 1996, there have been relief supplies from government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ll over the world after the difficulties and food crisis of North Korea was informed. In South Korea, civil institutes covering religious groups and vari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played active roles from media promotion for Support for North Korea to donations for North Korean brethren. Besides, they initiated "A Million Signature-seeking Campaign urging South Korean government to Aid North Korea", based on the conception that government and conglomerates have to cooperate. During this process, there had been gathered donations and supplies from various Korean classes and we could reassure that North Koreans

were none other than our brethren, one Korean people. Despite Kim Young-Sam Administration's restriction of Support for North Korea, various civil organizations donated in their own and sent supplies direct to North Korea. This restriction by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roved how empty and hypocritical the governmental support for North Korea was. We could witness the cooperation and reuniting of both Koreas through this process.

On the other hand, Support for North Korea, starting from food supply at the beginning, have diversified into medical supplies, aids to preparations for winter, this year's fertilizer supplies, corn crop cultivation and movement of making forest of Peace. In the early period, we sent corns and flours to the news of increasing famine and directed medical supplies to prevent more deaths from deficiency of medicine. However, as most people agreed that economic crisis and food crisis were chronic and from systemic problems, a new public opinion gained influence; to let them learn how to fish, instead of providing fish directly. In particular, since later 1998 there suggested an idea it is better to send fertilizer in order to make fertile land and increase the production of food in North Korea. Early this year, it was expected to support about twenty five thousand tons of fertilizer under the cooperation among civil organizations, the Red Cross Society and South Korean government. Still, the aid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has stopped after the Hostilities in the West Sea and civil support has been of little help. Besides, conversational channel between inner Korean authorities was in pause as well, making the situation more difficult.

In the case of 'Movement to make Forest of Peace' and 'Cultivation of Corn crop' from Corn Foundation, they are processed with a long term plan and perspective rather than with temporary itinerary.

Then let's have a close look what we have achieved from the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Above all, the greatest achievement is that citizens from both Koreas could find the way to coexist exist regardless of circumstances around Korean Peninsula. Even though North and South Korea had been through conflicts and half century-old adverse relationship after National Partition, the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had provided a golden opportunity to find the sameness of each other and wish for unity and cooperation of Korean people.

For next, as South Korea has been into economic turmoil since Asian financial crisis in 1997, the fact has become evident that both Koreas from the same root got into difficulties due to National Partition and it is necessary for both to cooperate and harmonize in order to overcome

crisis. In fact, there has been common requests from society to establish social safety net as a number of employees soared in South Korea. To found financial source for this policy, South-North Korean armament reduction and change its budget into peace and social welfare fund. After all, it is a significant remark that each crisis in both Koreas have originated from National Partition and contradiction if specific causes and situation differ.

In other aspects, it was the past the public was always in the passive side while diverse reunification operation being under way. Contrary to those way of running, this Suppor Movement for North Korea has provided the opportunity for all the public to take part in helping North Korea as reunification builders. When the public have grown to pay attention to see how their donations were spent and how the situation improved, people could realize the necessity of North-South reconciliation and reunification.

Nevertheless, there are several problems in support movement as well. After looking into problems, we shall proceed to consider our future tasks.

At first, if the difficulties of North Korea is chronic and systemic, support measure about it has to be long-term planned and eclectic. While it is positive that the support for North Korea by civil organizations have evolved from relief supplies into fertilizer provision, this is yet to be developed in the general phase of agricultural support in North Korea. It is crucial to provide surplus farming tools, fertilizer, seeds as well as agricultural technologies for the self-support of North Korea. So far, the forms of support was mostly sent to appointed regions according to religions, classes and provinces. If the South-North relationship goes into amity and inner Korean trust is premised, it would be possible to establish sisterhood relationship between regions and organizations of both Koreas.

Overall states of support movement, by the way, has been dispersed following individual itinerary as there isn't enough network between organizations. Even if civil organizations cannot decide kinds of support items and its amount, it will be desirable to send required items to the most needy regions at the right times through exchange of information.

For the third, the religious groups leading the Support Movement had been indulged in proselytizing their denominations exceedingly. At the beginning of aid, the courage and conscience of religious people made it possible to move the public mind and to get considerable amount of donations. In some occasions, however, some groups gathered a great fund to evangelize,

exploiting the cause of Support movement and made some social stir. From the beginning, support movement might begun from compassion, sympathy or generosity among religious groups, but now it has to provide long term fundamentals of reunification to reassure the homogeneity of both Korean people and to improve the amity between both Koreas.

For last, not the least important factor, the attitude of South Korean government needs criticizing. Kim Dae-Jung Administration showed clear difference in South-North relating policies comparing with other administrations. Still it is not encouraging to stick into mutualism about the support for North Korea. Now the conflicts of systems in inner Koreas are over, and we need the wisdom and understanding of big brother in better times. There are few options on the side of North Korean government who had great priority in sustaining its pride if we ask certain favors in return of our support. Rather, we need to obtain trust between governments through stable support on the basis of social coherence of South Korea.

It's been four years since the difficulties in North Korea was known and the support movement for North Korea has started all over the country. Considering the amount of support in reality, the aid from civil sectors is of small quantity, although its role to promote the public compassion is considerable. Thus, there is no consistency to seek active participation from government, conglomerates and mass media. Simply it is not enough to expect government policies or authorities to be more active, because there is urgent premise upon this change; the premise is the public mind. For this, there is leeway for civil organizations to make way for the public. On the foundation of greater effort from civil organizations and their members, if we add broad support from government, it is not far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between both Koreas. Now it's time to make this work. ■

헤이그 평화회의 보고

1. 헤이그 평화회의 개요

1-1. The Hague Appeal for Peace 1999

20세기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전쟁과 기아로 죽은 야만의 세기이다. 그러나 20세기는 동시에 억압에 저항하고, 성·인종·종교 그리고 민족간의 오랜 편견을 극복하려는 시민의 힘이 아래로부터 솟구쳐 오른 때이기도 하다. 그 20세기의 막바지를 코소보의 포성이 장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는 100년 전 헤이그 만국평화회의를 기념하고 전쟁의 세기였던 20세기를 마감하면서 다가오는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대규모 평화회의, The Hague Appeal for Peace 1999가 열렸다.

지난 99년 동안의 세계 평화운동의 성공과 실패를 점검하고 새 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한 이번 헤이그 평화회의에는 전세계 수백개 단체에서 7,000명이 넘는 활동가들이 참가하였으며, 참가자들 중에는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 남아공의 투투 주교, 노벨 평화상 수상자인 동티모르의 호세 라모스 오르타와 과테말라의 리고베르타 멘추 등 세계 평화운동 지도자 및 인권운동가들 뿐만 아니라 몇몇 진보적인 정부 인사들도 포함되어 대회의 화려한 외양을 과시하였다.

5일 동안 진행된 본회의는 1)무력에 의한 전쟁의 예방과 해결, 2)군축과 인간 안보, 3)국제 인도주의와 인권 법안 및 기구들, 4)전쟁 원인의 근절과 평화의 문화를 4대 주제로 하여, 크게 개막식과 폐막식, 4대 주제에 관한 plenary session, 각 주제별 core sessions, 그리고 여타의 평화문제들을 다루는

global forum과 문화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져 전체적으로 약 400개 이상의 모임이 진행되었으며, 그 외에도 각종 전시회와 이벤트가 각국 단체들의 부스 및 회의장 주변 곳곳에서 날마다 펼쳐지고 있었다.

1-2. 평화의 도시 헤이그

헤이그는 1889년 당시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스 2세의 제안으로 전세계의 평화 정착과 군비경쟁 억제 위한 제1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렸던 도시이다. 지금도 이 도시에 건재해 있는 평화궁은 바로 그 결과물인 상설중재재판소를 설립하면서 세워진 건물로서, 현재는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입주해 있는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그 이름에 담긴 염원도 무색하게 바로 15년 뒤인 1914년 발칸반도로부터 촉발된 제1차 세계대전을 시작으로 이 건물은 오히려 평화가 아닌 전쟁의 산 증인이 되어버렸고, 아이러니하게도, 100년의 시간을 넘어 또 다시 발칸반도의 분쟁과 평화의 세기를 촉구하는 만국평화회의의 개막이라는 역사의 재현을 지켜보게 된 것이다.

1-3. 시민사회가 주관한 세계 평화회의

100년 전의 헤이그 만국평화회의와 지금의 헤이그 평화회의간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회의장소 둘째, 영구적인 평화정착과 군비경쟁 억제라는 대주제 셋째, 그 때나 지금이나 세계 곳곳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무력분쟁들. 그렇지만 다른 점들도 존재한다. 그 중에서 이번 헤이그 평화회의를 차별화시키는 가장 큰 특색은, 지난번과 달리 이 회의는 NGOs들에 의해 조직되었다는 점이다. 이번 헤이그 평화회의는 “역사상 전쟁이 가장 많았던 세기로 기억될 20세기를 마감하면서 전쟁과 군비경쟁을 종식하고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들기 위해” 전세계 1,000여 개의 NGOs들이 주최하고 일부 국가, 그리고 UN총회가 후원한 세계 평화회의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원래 이 회의는 UN이 92년 리우환경회의를 필두로 진행하고 있던 ‘20세기의 전지구적 문제들에 관한 세계회의 시리즈’의 최종 목표로 1989년 말부터 비동맹국들을 주축으로 제안되어 온 회의였다고 하는데, 안보리의 영구회원국 중 몇 나라가 안보와 평화 문제에 관한 배타적 관할권을 계속 고집함으로써 결국 NGOs들이 중심이 되어 이를 개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그 동안 지구적 문제들에 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 하면서 그 해결을 위해 다양하고 창조적인 활동들을 전개해 온 NGOs들의 발전된 역량, 이번 회의를 통해 그 동안 주권국가들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안보와 평화라는 주제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가능하게 했다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은 대회 조직위원장인 Cora Weiss의 개막연설에서 잘 드러나 있다. 즉, 평화문제에 관한 ‘국가의 실패’와 ‘유엔의 한계’라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제는 시민사회가 정부 및 국제기구와 대등하게 국제평화와 안보 문제에 참여하는 ‘신외교(New Diplomacy)’를 실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1-4. 주요 회의내용

따라서 이번 회의의 4대 주제는 모두 '신외교'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접근방법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시민사회의 시각에서 전쟁의 원인과 평화/안보를 새롭게 정의하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팍스 로마나의 이성훈씨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에 대비하라"는 현실주의에서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건설하라"는 평화주의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회에서 주요하게 다루어졌던 내용들을 짚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우선 새로운 안보의 개념. 자료에 따르면, 전세계 인구의 3/5에 달하는 44억 명의 사람들이 최소한의 위생시설도 갖추지 못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고, 제3세계에는 하루에 1달러도 못 미치는 소득을 버는 사람들이 13억이나 존재하고 있는데, 전세계 연간 군사비 지출액은 자그마치 7,800억 달러에 달하는 반면 기초적인 보건과 영양 등 인간개발에 사용되는 비용은 겨우 130억 달러로 군사비의 2%에도 못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사비는 국가안보라는 미명하에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모든 전쟁비용이 국가안보라는 이름으로 계속 정당화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는 앞으로도 인류는 끊임없는 폭력과 전쟁으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명백히 인간의 안보와 세계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며, 따라서 이제 안보는 군사안보만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 요구와 생태적 요구 등을 포함하는 새로운 안보의 개념으로 확대되어야 하며, 군사비는 인간의 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투자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평화운동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들. 안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서는 탈냉전시대 평화와 안보문제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과거 냉전시대의 국제평화운동이 핵 문제(현재 전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히로시마에 투하되었던 폭탄 750,000개에 맞먹는 수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과는 달리 탈냉전의 90년대에는 대인지뢰금지운동의 성과에 힘입어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운동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 주목을 받았던 운동들로는 소형무기거래 금지운동(90년대 이후 발생한 50여개의 지역분쟁 중 47개 분쟁에서 소형무기를 사용), 18살 미만 청소년의 군대 징집과 군사훈련 금지, 국제형사재판소(ICC) 비준(99년 5월 현재 2개국(세네갈과 트리니다드 앤 토바고)이 비준하였고 80개국이 사인한 상태, 60개국이 비준하면 효력 발생), 전쟁 예방을 위한 국제 캠페인, 2000년 비핵화를 위한 행진, 학교에서의 평화교육 의무화(신외교를 실천할 역량을 가진 차세대 양성이 목표) 캠페인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들 캠페인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으로 크게 확산될 전망이다.

셋째, 코소보 사태에 대한 논쟁. 현재 세계 평화운동 진영 최대의 관심사이자 고민거리는 아마도 코소보 사태일 것이다(이를 증명하듯 코소보 session은 회의기간 중 날마다 잡혀 있었다). 이 전쟁은 나토의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개입과 밀로세비치의 반인도적인 인종청소라는 두 반평화적 집단의 본질적인 부도덕성으로 인해 평화운동 세력들로 하여금 어느 편에도 설 수 없도록 하는 딜레마를 연출하였다. 회의가 열린 헤이그는 나토 회원국의 땅이며, 한편 평화회의와 같은 시기에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에서는 유고의 제소로 나토의 국제법 위반 여부를 둘러싼 재판이 진행중이었다는 사실도 드라마

틱하지 않을 수 없다. 코소보 사태와 관련하여 회의기간 중에 진행된 다양한 토론장에서는 코소보에서 막 탈출한 알바니아계 여성이 자신의 경험을 증언하면서 밀로세비치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기도 했고, 코소보 지역의 '인종청소'가 악화되는 것을 미리 막지 못한 것은 침체한 유럽 평화운동의 현재를 반영한 것이라는 반성과 자책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역시 참가자 대다수는 '인도주의적 개입'이란 명분으로 진행되고 있는 나토의 공습에 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동티모르의 독립운동가 호세 라모스 오르타는 "현재 유고 공습에 참여하고 있는 나토회원국들은 대부분 인도네시아로의 무기수출을 통해 동티모르의 인종학살을 도왔던 반인도적 집단"이라며 이들의 명분을 강하게 비난하였다. 그로부터 한달여 후, 현재 코소보에서는 세르비아군이 평화협정을 받아들여 철수하고, 이들을 대신하여 NATO의 평화유지군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NATO군의 승리로 코소보 사태는 일단락된 것이다.

넷째, 전쟁(갈등과 분쟁)의 근본 원인. "다국적기업이 지배하는 세계 질서야말로 전쟁의 근본 원인"이라고 말한 반다나 슈바의 말처럼, 이번 회의에서 많은 이들은 전쟁의 근본 원인으로 경제의 세계화에 주목하였다. 전쟁은 단순히 인종청소나 영토분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등한 무역, 실업, 성적 불평등, 아동착취, 열악한 노동조건에 기반한 수출주도형 경제 등 민중에 대한 모든 억압적 요소와 환경들 속에도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UNDP의 보고에 따르면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경우 해마다 GDP의 20 퍼센트 정도가 외채 상환에 쓰여지고 있는데, 이와 비슷한 수준에 있는 최극빈 20개국의 외채를 탕감해 줄 경우 1년에 7백만의 아동을 기아로부터 살려낼 수 있을 것이라 한다. 과도한 외채 부담으로 인해 1주일 동안 사망하는 아동의 수가 대략 134,000명, 지난 20세기 동안 각종 무력분쟁으로 인해 사망한 사람들의 수가 연평균 160만 명. 과연 어느 쪽이 더 치명적인 전쟁인지는 이러한 수치들이 잘 대변해주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3세계에서의 전쟁 위협은 주변 국가들이 아니라 내부의 빈곤으로부터 온다"며 가난한 국가들의 외채 탕감을 요구한 호세 라모스 오르타의 주장은 크게 호소력을 갖는다.

한편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은 군사대국화를 통해 오히려 더 공고해지고 있는 듯 하다. 이는 지난 3월에 열린 NATO 50주년 기념식에 초대된 40개의 외부집단이 모두 무기제조업자들이었고, 이들이 한 목소리로 시장의 자유화를 외쳤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97-98년 2년 사이에 나토 회원국들은 무기구입을 위해 4,700억 달러가 넘는 돈을 썼고(이와는 대조적으로 90년대를 통틀어 UN이 실시한 개발프로그램에 배정된 예산은 고작 1,537억 달러에 불과했다.), 이제는 전화(戰火)로 뒤덮인 유고의 복구를 위해 다국적 기업들과 금융전문가들, 부동산업자들이 대기하고 있다. 파괴와 복구에 모두 경제적 이익이 걸려 있는 것이다. 현재 지구상에는 38개에 달하는 무력분쟁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이 유럽의 옛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등지의 제3세계 국가들이라고 한다. 세계 최극빈국들의 총외채가 이미 3,7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는 현실에서(부채의 90%는 G7국가들과 IMF, 그리고 World Bank의 몫이다.), 결국 이들 모두는 세계화한 자본의 질서 속에서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기구, 군수산업체들과 결탁한 강대국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한 희생양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과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5일간의 회의는 전쟁을 불법화하고 평화의 문화를 창

조할 이행전략들을 포괄적으로 담은 '21세기 평화와 정의를 위한 헤이그 의제'의 채택으로 정리되어, 대회 마지막날 코피 아난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되었다. 이 의제는 앞으로 각 국가와 지역에서 검토를 거쳐 실행될 것이며, 1999년 11월 17일에 열리는 유엔총회에서도 발표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날 채택된 헤이그 의제는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정의로운 세계질서를 이룩하기 위한 열 가지 기본 원칙

1. 전세계의 모든 의회는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와 같이 전쟁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여야 한다.
2. 전세계의 모든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의 구속력 있는 사법적 권한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전세계의 모든 정부는 국제형사재판소의 설립안과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고 실천해야 한다.
4. 모든 국가는 정부와 국제기구 및 시민사회의 공동협력을 보장하는 '신외교(New Diplomacy)'를 수용 촉진해야 한다.
5. 세계 공동체는 인도주의적 위기상황 앞에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 무력을 사용하기에 앞서 가능한 모든 창조적인 외교적 수단이 강구되어야 하며, 무력사용의 경우 유엔의 권한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6. 핵무기 철폐를 위한 협약에 관한 협상이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7. 소형무기 거래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한다.
8. 경제적 권리가 시민적 권리처럼 동등하고 진지하게 다뤄져야 한다.
9. 평화교육이 전세계의 모든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10.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지구적 행동계획(Global Action to Prevent War)이 평화로운 세계질서의 기본이 돼야 한다.

1-5. 한국 NGO 참가단의 활동

한편 헤이그 평화회의에 참가한 14개 한국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동 부스 운영을 통하여 한국의 평화 만들기와 관련한 다양한 활동들을 국제적으로 알리고, 세계 각국 NGOs와의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한국 평화체제 형성의 중요성을 여론화시키는데 주력하였다. 한국 NGO 참가단이 준비한 성명서의 주요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한간의 평화협정체결, 둘째,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지위·역할 제고, 셋째, 남북한 정부는 군비축소를 단행하고 인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인간안보의 개념을 도입할 것, 넷째, 남북한 정부의 대인지뢰금지협약 가입, 다섯째, 전역 미사일방어(TMD) 계획과 미일 신가이드라인 개정의 반대, 여섯째, 2000년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SEM에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전세계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할 것.

한국 참가자들이 발제한 프로그램으로는 ① 여성이 평화를 이끈다 - 이현숙(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공동대표): 5월 7-11일, Women Peacemakers Program 아시아지역 Working group으로 참여, ② 안보에 대한 군사위협: 여성과 군사폭력 - 정유진(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 김현선(새움터): 5월 12-14일, '군사주의를 반대하는 캠페인과 아시아태평양국가에 대한 영향', '전쟁과 군사갈등에서의 여성과 어린이' 주제 발표, ③ 아시아-유럽의 대안적인 안보전략 - 김창수(참여연대), 이대훈(참여연대 협동처장): 5월 11-13일, '무기거래-안보와 인권에 대한 위협', '2000 ASEM 회의를 향한 캠페인 전략' 주제 발표, ④ Global Peace Camp - 김영 목사(이야기 공동체): 5월 12일, 노래, 시, 낭독, 춤, 그림, 행위 등을 통하여 평화의 이미지 표현, ⑤ 한반도-일본의 비핵지대화 - 김용한(우리 땅 미군기지 되찾기 전국공동대책위원회): 5월 14일, '동북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등이 있었다.

2. 워크숍 주요 토론, 제안 사항

가. 1차 워크숍시 주요 발표 및 토론 요지

- 아시아의 군비경쟁의 심각성과 이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의 필요성, 아시아의 군비경쟁과 전쟁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유럽-아시아 평화단체간의 공조 필요성
- 미국 주도의 일방적 경제, 무역자유화 조치가 아세안과 같은 지역 안보/협력기구 등 지역의 자주적인 안보, 협력 관계의 약화에 미친 영향
- 최근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어체계(TMD) 도입계획과 미일 신방위지침(신가이드라인)이 아시아 전역에 안보 위협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인식
- 나토확대전략이 미치는 부정적 파급효과, 특히 최근 유고공습이 가져온 러미, 중미의 긴장관계와 미국주도 군사패권에 대한 반감 확대
- 아시아의 자주적인 다자간 협력적 안보체계 발전에 가장 큰 방해 요인으로서 아시아의 미군 기지들
-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들을 죽인다": 군수무역이 갖고 있는 반인도주의, 비윤리적 성격을 효과적으로 여론화할 필요성
- 군수무역 제제, 군비증강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각국 시민사회 주체간의 협력으로 협력적 안보체계 구축의 발판을 놓을 필요성

나. 향후 공동 캠페인과 연관된 주요 제안사항들

- 평화, 군수무역 문제를 아셈 III의 주요 의제로 넣는 압력운동을 펴자.
- 무역자유화/세계화가 지역의 자주적인 안보체제 형성에 미친 영향을 평가해서 알리자.
- 미국의 TMD 도입시도와 미일 신방위지침에 대응하는 국제운동을 펴자.
- 국제무기박람회 반대하는 공공행동을 유럽, 아시아에서 동시에 조직하자.
- 미국에 의해 조작, 지배되고 있는 "위협", "안보", "적"에 대한 일반 관념을 바꾸는 노력을 통해서 대안적인 안보체제가 필요하고 가능하다는 여론화활동을 적극 전개하자.
- 유엔 재래식무기등록제도 등 기존의 감시체제를 이용해서 군수무역을 감시하는 활동을 공동으로 전개하자.
- 한국의 평화통일운동과 국제평화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자.
- 대안 안보체제, 군비통제, 군축, OSCE(유럽안보협력기구), ARF(아시아지역포럼)과 같은 지역적 자주 안보협의체, 미군기지가 야기하는 안보 위협과 주둔 미군들의 범죄, 미국주도 나토의 군사행동, 지역적 평화운동 등의 주제로 양 지역간 시민, 사회단체간의 협의를 확대, 강화하자.
- OSCE와 같은 종합적 협력적 안보체제가 갖고 있는 장점과 한계, 그 분쟁예방 및 사후조정 체제를 세밀히 연구하고 이에 대한 공공 인식을 높이도록 하자.

다. 캠페인 전략

(1) 아셈 III 의제에 대안 안보와 평화를 상징하기 위한 압력활동

- 유럽과 아시아에서 아셈에 관련된 민간단체들간의 협의로 비군사적인 대안적 안보체제의 개념과 필요성을 역설하는 작업(결과물: 정책 자료 및 홍보/교육 자료, 기본 원리: 자결권, 다자주의, 상호협력, 군축, 위협 개념의 변경, 방콕의 포커스가 이런 일을 이미 추진하고 있으며, 미군기지 문제로 국제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려고 추진 중에 있다.)
- 아셈 III 본회의(2000년 10월) 이전에 미군기지, TMD, 미일 신방위지침에 관한 사전 여론화 프로그램
- 한국 평화통일운동에 대한 연대 : 1999년 8월 중순 한국에서 개최되는 평화통일 행사에 아셈 관련 단체들과 외국 평화운동단체들이 참여해서 평화적 통일에 대한 연대와 아셈 III에서 평화문제를 다룰 것을 촉구하는 계기로.
- 정책결정권자와 시민사회 여론주도층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시아 대안 안보를 위한 민중의 제안"이라는 잘 준비된 제안문 겸 정책문서를 아셈 민간협의구조를 통해 생산, 이용.
- 현재 벨기에, 프랑스 정부 등이 구상중인 아셈 관련 비경제부문 프로그램에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개별 정부에 대한 로비, 압력, 참여활동.

(2) 군수무역에 초점을 맞추는 대중 국제캠페인

- 아시아의 새로운 안보를 위한 캠페인 과 같은 명칭을 생각할 수 있다.
- 지속적인 군축운동과 미 안보전략의 변화를 야기하기 위해서는 아시아와 유럽의 평화운동단체간에 안정적인 협력구조를 우선 만들어야 한다.
- 유럽과 아시아 주요 대도시에서의 국제무기박람회를 계기로 잡아 동시에 비판 행동을 전개함으로써 군수무역을 이슈화하는 것으로 캠페인을 시작할 수 있다. 계획이 성립되면 99년 8월 15일 한국에서의 평화통일행사때 이를 선포할 수 있다.
- 군수무역의 규모와 내역, 국방비 증강 현실, TMD 계획과 미일 신방위지침의 의미와 파급효과 등에 관한 홍보 교육자료를 만들고 이를 사회단체들의 대중 교육프로그램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특히 아셈 III을 홍보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 군수무역의 비윤리적 측면을 부각해서 주빌리 2000 운동처럼 예술가와 가수, 문인들의 참여를 통해 구축운동을 대중화하도록 하자. "무기는 사용되기 전부터 사람들을 죽인다 (Weapons Kill Before They Are Used!)"
- 아셈의 틀 안에 군수무역에 관한 정부-민간단체간 대화의 공간을 두는 것을 목표에 넣자.

3. 정리 모임 주요 토론 요지

다음 다섯 가지가 구체적인 공동 활동으로 제기되고 또 참가자들 사이에 의지 확인이 있었습니다. 물론 결정을 내리는 회의가 아니라 참가자들의 전반적인 의견을 모으는 모임이었습니다.

가. 군수무역 감시 프로젝트와 이메일 정보교환체계

케어커봉사단이 정보교환 실무를 맡기로 하고, 네덜란드 ENAAT에서 아시아 유럽 공동의 군수무역 감시활동계획서를 작성해서 회람/검토하기로 했고, 1차 목표를 아셈 III에 제출할 아시아유럽 군수무역 보고서를 만들어 압력 및 여론화하는 것으로 함. 필요할 경우 영국의 군수무역 감시단체들을 이대훈이 교섭해 참여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함.

나. 한국 8.15 행사와의 연대

- (1) 김창수씨가 제안한 것으로 국제 평화운동이 다시금 한국 평화운동과 결합하는 계기가 되고, 이를 계기로 아셈 활동 민간단체들이 한국에 모여 아셈 III을 위한 1차 민간 아셈 준비회의(국제준비위)를 개최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함. 이를 아셈 민간회의의 참가단체에게 제안, 협의토록 함.
- (2) 평택 미군기지대책회의 김용한씨가 제안한 것으로 매주 수요일 일본 대사관 앞 시위와 매주 금요일 미국 대사관 앞 시위를 연계시켜 8.15. 주간에 나토공습과 미일 신방위지침에 반대하는 시위를

외국 참가자들과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함.

다. 무기박람회 반대 행동

유럽 단체들은 2000년 6월 프랑스에서 개최되는 대규모 국제무기박람회를 깽판놓을 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비슷한 시기에 아시아에서도 같은 심볼(상징, 옷, 구호 등)로 행동을 조직하도록 노력함. 초기 준비와 계획이 설 경우 8.15 행사때 이를 선포함.

라. 일본 평화운동에 대한 지원과 연대

현재 98년 8월 북한의 로켓/미사일(?) 발사와 미일 신방위지침으로 일본 사회가 안보문제에 민감해져 있고 침체해있던 평화운동이 다시 긴장하는 상황이므로, 일본 평화운동을 지원하고 대안적 안보 체제에 관한 의미있는 국제행사를 일본에서 개최하도록 추진함.

마. 군수무역과 노동운동의 관계

사회진보연대 국제정책정보센터의 김석씨의 제안으로 군수무역이 노동자와 노동조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노동운동의 인식과 대응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사하기로 함. ■

평화로 한마음! 통일로 한걸음!

· · 부 · 록 2 · ·

아시아 유럽 민중의 전망과 제안

PEOPLE'S VISION : 더 정의롭고 평등하며 지속가능한 세계를 향해

기본 원칙

우리는 아시아유럽회의(이하 ASEM, 아셈)가 회원국들에게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책임을 부여한다고 믿는다.

더 정의롭고 평등한 세계를 위해 일해온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민간단체, 협의체, 또는 시민으로서 우리는 아시아와 유럽의 지도자들이 아래의 네가지 기본원칙에 기반해 각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상호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을 요구한다.

- 1)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주의법에서 합의된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의 증진
- 2)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패턴의 추구.
- 3) 남녀평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경제적, 사회적 평등과 정의.
- 4) 아셈과정에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참여 보장. 이를 위하여 아셈은 더욱 투명해져야 하고 각국 국회의 책임하에 놓여야 한다.

우리는 인권, 민족자결권, 개발 및 개방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이 국내적, 국제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사회적 발전을 위한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한다고 믿는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며 각 사회마다 다양한 모습을 띤다. 그러나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의 한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체계를 촉진하는 데에는 필수적인 핵심 과제가 몇가지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아셈 회원국의 성실한 의지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영역에 적용되어야 한다.

1. 노동자,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

아셈 회원국중 많은 나라에서 지난 약 20 여년동안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가 점진적으로 침해되어 왔다. 주요한 요인은, 세계시장에서 수출국들 사이에 항상 벌어지는 치열한 경쟁에서 기인한 임금과 근로조건의 악화 그에 수반된 임시고용의 증대경향이다. 종종 이주노동자들이 이러한 악화된 근로상황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다. 노동유연화는 고용안정과 소득보장을 위협하고 이미 증대되고 있는 실업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며 노동자의 단결권을 저해하고 있다.

상당수 정부들이, 초국적 기업과 그 자회사들의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적, 환경적, 경제적 규제를 할수 있는 권한을 의도적으로 줄여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는 억압적인 노동법과 노동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제한하는 조치의 채택과 병행되었다. 아울러 이러한 정부들은 노동자의 권리 및 민주적 권리를 주장한 사람들은 기소·구금하는 반면, 초국적기업들에게는 노동자와 지역자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업의 자유를 허용하는, 수출자유지역의 확대와 같은 경제 정책을 도입했다. 상당수 국가에서 비공식부문 노동자들과 노동인구의 대다수의 경제·사회적 상황이 악화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상당수 노동자들의 시민권이 침해된 것과 같다.

우리는 ILO에서 제정된 핵심 노동기준의 승인과 준수를 지지하지만, 이러한 노동기준을 보호무역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단호히 거부한다.

제안 사항

아셈 회원국 정부는 모든 노동자들의 기본적 인권을 준수할 것을 재확인해야 한다.

- 1.1 자신의 선택에 따라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참여하며 단체교섭을 맺을 권리
- 1.2 노예노동이나 예속된 노동으로부터 자유
- 1.3 성별, 인종, 피부색, 종교, 정치적 견해, 국적, 소수민족으로 인하여 차별받지 않을 권리
- 1.4 착취적이고 위대한 일에 대한 아동노동의 금지

ILO조약 29, 87, 98, 100, 105, 111, 138조에 규정된 이러한 핵심 노동기준은 아셈정상회담에서 서

명된 「투자증진행동계획(IFAP)」과 「무역촉진행동계획(TFAP)」 협약에도 포함되어야 한다.

- 1.5 각국 정부는 이미 비준한 핵심 노동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 1.6 노동자들의 보건·안전 보장을 위한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 1.7 아셈 정부들은 유엔에서 채택된 「이주노동자 및 가족의 보호를 위한 협약」을 승인해야 한다.

2. 여성, 민주주의, 그리고 발전

여성의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권리의 보호와 증진은 지속가능한 사회적 경제적 개발에 기본이다. 무역자유화는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공식부문에서 제외된 주변계층 사람들을 더욱 취약하게 한다. 특히 가난한 여성들은 종종 매우 불이익을 당하여 어떤 새로운 기회도 이용할 수 없는 처지가 되고 있다. 새로운 고용기회로부터 이익을 얻는 사람들조차 건강과 가족,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여가 시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

제안 사항

- 2.1 향후 모든 아시아-유럽간의 원조, 무역, 정치적 관계 설정과정에 성차별여부에 대한 분석이 포함되어야 한다.
- 2.2 아시아-유럽의 관계는 성에 기반한 불평등을 줄이고 경제자원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정치적 권력의 분배를 증진할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 2.3 현존하는 여성에 대한 편견을 바로잡기 위하여 적극적인 행동프로그램이 성차별 여부에 대한 분석에 병행되어야 한다.

3. 아동

아동문제와 아동들이 겪는 결핍상황은 오랫동안 알려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나라들에서 - 특히 아시아에서 음식, 옷, 주거, 기본적인 의료필수품, 기본적인 교육, 폭력과 인권침해로부터의 보호 등 아동들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광범위한 요소가 충족되지 않은채 남아있다. 대부분의 정부들은, 아동 권리협약을 승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는 정치적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 다른 경우에는, 사회적 정책과 사회적 개발의 측면에서 잘못된 선택을 하여왔다. 특히 소외된 집단 - 도시빈민, 농부, 소수인종, 난민, 이민자 및 기타 계층의 아동과 관련하여 잘못된 정책 결정이 내려진 경우가 많다.

최근 극적인 경제발전 수준에도 불구하고, 아동노동의 현상은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 오늘날, 아시아는 전세계 아동노동의 3분의 2이상이 자행되는 곳이며 이 중에 가장 심한 형태의 아동노동이 포함되어 있다.

제안 사항

- 3.1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서명국으로서 아셈의 모든 회원국은 자국에서 - 소외되고 착취당하는 아동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더불어 - 아동권 증진과 보호 의지를 선언하고 약속해야 한다.
- 3.2 아셈회원국은, 아동의 권익을 위해 일하는 민간단체와 지역조직들의 견해와 경험을 수용하기 위하여 아동권리협약에 따른 모니터 활동 및 보고서를 제출하는 절차에 대한 참여구조를 보장하

고 정책결정과정을 투명하게 해야 한다.

- 3.3 아셈 정부들은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정책과 실행 양면으로 노력할 것을 즉각 효력을 발효하는 방식으로 선언해야 한다. 이 서약에는 아래 3.4 항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 3.4 정부들은 1998년에 새롭게 제정된 '가장 심각한 형태의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노동기구협약'의 채택을 지지하고 아동노동에 대한 국제기준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확인해야 한다.

4.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행위 근절

중국과 브루나이를 제외한 모든 아셈국가들은 스톡홀름행동강령을 채택했다. 강령에 따르면 모든 정부는 2000년까지 아동에 대한 상업적인 성적착취 문제에 대해 대책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5. 시민사회의 강화 - 인권, 민주주의, 자결권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화, 투명화와 책임성을 부여하는데 강한 시민사회의 존재는 근본적이다. 동시에 시민의 기본 욕구가 민주적 권리의 일부로 보장되는 것이 필수적이다. 개발·복지관련 민간단체, 노동조합, 여성단체, 인권단체, 농민단체, 지역공동체운동과 언론은 정책개발과 그 감시과정에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의의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안 사항

- 5.1 아셈정부들은 가능한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 참여와 공공책임성에 기반한 민주주의와 강력한 시민사회를 건설하고 지지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해야 한다.
- 5.2 아셈정부들은 집회, 결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존중해야 한다.
- 5.3 시민사회의 참여를 통하여 아시아에서 인권이 증진시킬 수 있는 지역적 인권제도의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 5.4 아셈은 인권, 참여민주주의, 민족자결권을 증진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치적 대화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버마, 동티모르, 티벳,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특정 지역에 근본적인 문제들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6. 무기 무역

냉전이후 기대되었던 평화의 효과는 현실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여러나라에 내전이 확대되고 있다. 무기거래는 계속되고 있으며 1995년 이후에는 22%나 증가하였다. 무기의 27%이상이 유럽에서 생산된다. 아시아는 무기구입이 증가가 가장 큰 곳이다.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적 위기로 인한 압

박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무기구입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 사회서비스 비용을 삭감하는 부담을 지우고 있다.

유럽연합은 세계의 가장 주요한 생산업자들과 무기수출업자의 근거지이다. 수백만의 생명을 위협하고 앓아가는 분쟁은 무기거래로 가열되고 있다. 또한 무기거래는 인권옹호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기거래와 시민 억압조치들은 유엔개발계획(UNDP)이 규정한 '인간안보'의 달성을 가로막는 주요한 요소이다.

제안 사항

- 6.1 아셈정부들은 무기 수출입을 통제하는 투명하고 규정력을 가진 체계를 구상하고 합의해야 한다.
- 6.2 유럽연합과 아시아 정부들은 각각 무기거래에 대한 "유럽 아시아 행동규칙"을 채택하고 범세계적인 의무규칙을 제정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 6.3 아셈정부들은 지뢰의 생산, 무역,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이행해야 한다.
- 6.4 아셈정부들은 무기의 생산과 구입, 판매를 감소시킬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 6.5 아셈정부들은 국방 및 안보예산의 세세한 내용을 대중에게 완전히 공개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환경과 경제적 개발

천연자원을 과잉 개발하고 환경을 회복불가능하게 훼손시키는 경제성장은 삶의 질과 생계, 그리고 문화를 파괴시키는 것으로 지역공동체를 소외시키고 곤궁하게 만든다. 이러한 양식은 뒤바뀌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천연자원에 대한 통제권을 다시 가져야 한다. 이는 국내법에 반영되어야 하며 무역과 투자 이익때문에 무효화되어서는 안된다. 아셈회원국들은 그동안 환경보존과 보호에 관련 많은 약속 - 예를 들어 「리우선언」과 「의제 21」 - 을 해왔다. 이중 일부 분야에서 다소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대부분은 정해진 목표에 이르지 못했다.

제안 사항

- 7.1 아셈회원국들은 교토에서 열린 기후변화회담의 긍정적인 성과를 기초로 오염물질배출 개선목표치에 합의하고 합의된 기간 시한안에 강제적인 감시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7.2 아셈회원국들은 「의제 21」 기준과 다른 국제환경협정에 어긋나는 모든 개발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각국 및 지역의제 21계획은 무역과 투자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특히 아셈회원국들은 이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력발전댐같은 모든 대규모 개발계획을 지원해서는 안된다.
- 7.3 투자증진행동계획(IFAP)과 무역촉진행동계획(TFAP)에는 무역과 투자가 지역공동체의 자원통제권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의무가 포함되어야 한다.

8. 지속적인 환경, 사회, 경제 개발을 위한 무역과 투자

아시아와 유럽의 아셈 회원국들이 지키기로 합의한 유엔 협약들은, 개발협력 분야 이외에도 국제무역·투자정책이 같은 목표에 입각해 있지 않다면 지켜질 수 없다. 직접투자 및 자본이동을 포함한 세계의 부의 이동과 무역은, 지속적인 사회·경제적 개발과 더 큰 정의와 평등이 증진되도록 적절히 통제되어야 한다. 무역과 투자는 정치·사회적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제안 사항

8.1 아셈은 투자증진활동계획과 무역촉진활동계획에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이 두가지 계획에서 무역과 투자 증대가 다음과 같은 일반목적에 따라야 한다는 분명한 표현을 포함할 것을 아셈 정부들에게 요구한다.

- 경제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증진
- 민주화 지원
- 남녀평등의 증진
- 식량안보 강화

위 두가지 계획은 환경보호,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국제기준, 그리고 핵심노동기준에 대한 7가지 주요 ILO조약의 준수를 규정하는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아셈 회원국들은 이러한 기준을 채택해야 하며 또한 이를 WTO의 목적과 실행을 재평가하는 지침으로 삼아야 한다.

9. 경제 사회적 위기에 대한 대응

아셈국가들간의 경제적 관계는 작년부터의 아시아 경제위기로 인해 혼란에 휩싸였다. 무역은 타격을 입었고 투자계획은 얼어붙었다. 현재의 위기는 금융위기 이상의 위기이다. 경제 침체로 이미 수백만의 사람들이 아무 잘못없이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사회적 불안이 증가하고 여러 국가에서 이민노동자들과 소수민족이 희생양이 되고 있다.

아시아 및 유럽의 정부들과 IMF와 같은 국제기구가 이 위기에 대처하는 방식은 위기의 사회적 충격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한 것이다.

세계은행, 유럽연합같은 다자간 기구들뿐만 아니라 많은 유럽정부들이 최근 남쪽 국가들(개도국)과의 관계에서 빈곤퇴치를 중심문제로 삼고 있다. 그리고 이 과제에 대하여 일관성 있게 대처해왔다. 이 점은 예를 들어 1997년 9월 발표된 영국정부의 백서에도 잘 나타난다. 그러나 이들은 아시아 위기에 대한 대책의 중심에 빈곤퇴치 문제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 대아시아 차관 조건에 포함된 조치들은 빈곤층의 삶을 보호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증진시키는 것보다 아시아에 무역과 투자 자유화조치를 확대시키는데 더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

제안 사항

- 9.1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 정부는 현재 제안된 위기타개 수단들이 빈곤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 9.2 국제통화기금과 아시아 정부들간의 협상과 협정 내용은 모두 공개되어야 하며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기획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공공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 9.3 유럽정부들은, 아시아의 민간부문이 이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IMF가 디플레이션 경제 프로그램을 아시아에 부과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
- 9.4 아시아 및 유럽 정부들은 국제자본시장을 조절할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자본시장의 유동성은 현재의 위기를 악화시키는데 매우 커다란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다.
- 9.5. 아시아 및 유럽 정부들은 국제통화기금과 세계은행의 차관제도와 정책 및 절차를 비판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 9.6 아시아 정부들은 아시아의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서 국제통화기금 이외의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

10. 아셈 진행과정의 인간화

현재까지 유럽연합과 아시아 각국 의회에서 아셈의 진행과정에 대한 민주적인 검토는 매우 제한된 수준으로 진행되었다.

아셈과정은 지금까지 정부간 협력과 기업이익의 대표자간의 협력을 증진하는데 집중해왔다. 그리고 아셈의 의제는 무역과 투자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그러나 실제로 아셈과정의 부정적, 긍정적인 영향을 느끼는 사람들, 즉 양 대륙의 여성과 남성, 노동자와 농민의 경험과 생각, 비전을 포괄하고 이를 배우는데는 어떤 관심도 기울이지 않았다. 선거로 뽑힌 유럽 의회대표들 또한 배제되었다. 아시아-유럽재단과 같은 기구가 설립된 세가지 본래 목적 중 하나는 인적교류의 신장이라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제안 사항

10.1 아셈 회원국 정부들은 아셈 과정을 더욱 투명하고 책임성 있는 과정으로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민중대 민중의 인적교류를 증진시키고 광범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수용하고 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모든 아셈 관련 문서는 공공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공개되어야 한다. ■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가 발행한 [’98ASEM 한국민간단체활동보고서]에 수록된 글입니다. 참여연대 국제인권센터는 1999년 9월에 참여연대에서 독립하여 (가칭) 국제평화인권연대로 새 출발할 예정입니다.

Brid.

평화경제에 영향을 위한 과제

- 새로운 안보체제 구축

미국 패권주의의 공방 → 미국 봉쇄, 그러나 ^{아시아 지역 내의} 게임의 확장용 마약이

↓
마약지.

- 무기감축의 중요

[과거
현재]

- 아개국들의 평화운동 영향

유럽, 그러나 현재 전혀 대응 X

평화운동이 유급한 상황이기 지대 대응 X

자본이 너무 강한 위안.

→ NATO의 확장.

EU 확장의 의도: 유럽정체성 강화, 그러나 EU 확장한다, NATO도 확장한다.

유럽 통합운동, 발칸 지역, OREAN에서 한 세력권.

↓
동유럽 지역은 편입되어 가는 경향.

국내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직책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대표 (동국대 교수)
김성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김용한	우리땅미군기지퇴찾기전국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윤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노정선	연세대	교수
도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백승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
이철기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 (동국대 교수)
이수형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조성범	남북농발협	사무총장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해외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직책	비고
Brid Brennan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네덜란드
Pietje Vervest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네덜란드
Marco Mezzera	FOCUS	아시아담당 Staff	이탈리아
Martin Broek	ENAA (AMOK)	연구원	네덜란드
John Feffer	AFSC	아시아담당	미국
Karin Lee AFSC	아시아담당	미국	
Roland Wein	Asia House	코리아사회연구소 소장	독일
Gigi Francisco	DAWN	동남아시아지역담당	필리핀
Dorothy Guerrero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국제담당코디네이터	필리핀
Evelyn Ralais-Serrano	Forum Asia	캠페인 컨설턴트	태국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에 보내는 인사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가 주관하는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에 「준범서약서」라는 부당한 조건 때문에 참석할 수 없게 된 점을 먼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이번에 비록 성사되지 않았지만, 32년만의 저의 조국방문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가지로 애쓰셨던 「민족회의」와 「귀국추진위원회」의 여러분들께 뜨거운 감사인사를 보냅니다. 오랜 분단상황 속에서 자연히 있기 마련인 민족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행동을 구시대적인 유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준범서약서」로써 묶어놓고서 「민족화해」를 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대회에 참석할 수는 없지만, 통일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왔던 문제에 대해서 이 기회에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짧게는 새로운 한 세기, 길게는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고 있는 요즈음의 화두인 「지구화」가 한반도를 예외로 삼지 않고, 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민족통일에 대한 기존의 통념도 많이 변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 가운데는 날로 좋아져 가는 「지구촌」속에서 「민족국가」의 울타리도 사라져 가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는 「민족」이나 「민족주의」보다는 새로운 「세계시민사회」에로 우리의 눈을 돌려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유럽연합」의 출현과 같은 「지역통합」이 일고있는 것도 현실이고, 이에 따라 기존의 「민족국가」를 바탕으로 한 자기정체성의 내용도 변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250년 이상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구의 「민족국가」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해서 우리의 「민족」이나 「민족주의」문제를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족」이나 「민족주의」가 인간성에 대해서 긍정적인 기여를 했다고는 오히려 해동을 끼쳐왔다는 역사적 경험도 많았고, 사실 그러한 경험은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세의 시작과 더불어 우리 민족이 겪었던 식민지의 운명 그리고 이에 이은 민족분단의 비극을 청산하려했던 민중의 피맺힌 절규와 투쟁에 대한 적극적인 평가 없이, 「세계시민사회」의 이상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의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문화적인 압력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지구화」가 곧 「세계시민사회」의 형성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세계적인 범위에서 냉전체제가 청산되어 「역사」도 그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하지만, 민족간의 갈등은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재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냉전」이 아니라 「혈전」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한반도 정세를 두고 「민족문제」를 우리 스스로가 피해나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계체제」의 중심부에 자리잡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과연 한반도의 실질적인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에 얼마만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먼저 의구심을 갖습니다. 분단의 「효과적인 관

할」이 오늘의 국가이익에 더 합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우리가 확실한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토대로 남북이 스스로의 입지를 강화하고, 행동반경을 함께 넓혀 나가는 데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을 「자기 속에 들어있는 타자(他者)로서 바라보는 발상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남과 북이 똑같다면 통일이라는 문제가 처음부터 제기되지 않을 것이고, 남과 북이 아예 다르다면 마찬가지로 통일 문제가 애초부터 제기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과 북이 다르면서도 같고, 같으면서도 다른 긴장된 현실을 인정한 토대 위에서 공통분모를 확충해 나아가는 것이 「민족화해」이고 이러한 과정 자체가 바로 「통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에서 열리는 「국제대회」도 이러한 정신 속에서 한반도에서 냉전이 청산되고 평화정착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폭넓게 그리고 진지하게 논의되리라고 확신하면서 대회의 성공을 멀리서나마 뜨겁게 성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1999년 8월 12일

송 두 율

이번 국제대회는

해외NGO 단체들과 한반도 평화문제를 함께 논의하여 지난 5월에 있었던 헤이그 평화회의 성과를 발전시키고 이를 내년에 한국에서 개최될 '아셈2000대회'로 계승한다.

한반도의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이 21세기를 평화의 세기로 만드는 첫 출발이며 국제평화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내용으로 특별성명을 채택하여 이를 국제사회에 천명함으로써 한반도 문제를 국제평화문제로 이슈화한다.

20세기 전쟁과 냉전으로 인해 한반도가 겪어야만 했던 역사적 사례를 '20세기 한반도냉전 피해 10대 상처'로 정리하여 대회기간 중 이를 발표하고 향후 세계평화주의자들과 함께 해결방향을 모색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국제평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한다.

이를 위하여 이번국제대회가 끝나면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산하에 <20세기 상처를 생각하는 인도주의 센터>를 창설할 예정이다.

민족회의가 선정한 20세기 한반도 10대 상처

선정기준

- 일제식민지 지배로 인한 상흔을 간직하고 있는 동포
- 한국전쟁, 베트남전쟁등 금세기 전쟁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동포
- 분단으로 인하여 아픔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동포
- 이념을 초월해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 20세기의 아픔을 상징하는 사안

- | | |
|------------------|------------------|
| ■ 정신대 할머니 | ■ 베트남 전쟁 고엽제 피해자 |
| ■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피폭자 | ■ 대인지뢰 피해자 |
| ■ 태평양 전쟁 희생자 | ■ 미군범죄 피해자 |
| ■ 한국전쟁 피해자 | ■ 장기수와 국가보안법 피해자 |
| ■ 이산가족 | ■ 조선족 사기 피해자 |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는

1994년 7월 2일 54개의 민간단체가 모여 창립한 민간통일운동단체로, 남과 북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합의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으며, 온 겨레가 함께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넘어 머리를 맞대고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한국의 대표적인 비정부기구입니다.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KNCR (Korean National Congress for Reunification)
 전화: 708-4981 팩스: 708-4982
 Email: onekr@yahoo.co.kr http://user.alpha.co.kr/~kncr



PEACE BRINGS HUMAN RIGHTS

한반도 냉전청산과 평화정착을 위한 국제대회

ONE HEART TO PEACE ONE STEP TO ONE KOREA



일시: 1999년 8월 12일(목요일)~8월 14일(토요일)

행사내용

8월 12일

오후 7시, 국제대회 참석인사 환영만찬

8월 13일

오전 12시, 용산미군기지반환요구 시위, 용산미군기지 앞
 오후 2시, 개막식 및 제1학술토론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오후 6시, 평화기원 작은 마당, 마로니에공원 야외무대

8월 14일

오전 9시, 제2학술토론회,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오후 2시, ASEM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샵, 타워호텔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발표, 철학카페네티나루

주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화/ 745-5872, 708-4981 팩스/ 708-4982)

주최: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준비위원회

후원: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CBS, 동아일보 협찬: 삼성전자

행사일정

8월 13일(금요일)

■ 집회

- 1) 때: 1999년 8월 13일 오전 12시 ~ 오후 1시
- 2) 장소: 용산미군기지앞
- 3) 주관: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 4) 참석: 해외NGO, 해외동포, 주관단체 등
- 5) 내용: 용산미군기지 반환, 한미행정협정 개정, 주한미군범죄 근절 낭독 등

■ 국제대회 개막식

- 1) 때: 1999년 8월 13일 오후 2시 ~ 오후 2시 30분
- 2) 장소: 프레스덴타 국제회의장

■ 제 1 학술토론회

- 1) 주제: 21세기 세계 평화의 전망과 평화운동의 방향
 - 2) 때: 1999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 ~ 오후 6시
 - 3) 장소: 프레스덴타 국제회의장
 - 4) 내용
 - 가. 발제1
 - 주제: 동북아 및 세계평화체제 구축방향
 - 발제자: John Feffer(AFSC)
 - 나. 발제2
 - 주제: 평화운동의 국제적 연대의 방향
 - 발제자: Martin Broke(ENAAT)
- 다. 사회: 이장희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 21세기 세계평화 기원 작은마당

- 1) 의의: 대인지뢰 피해자, 전쟁 피해자들 및 각국 참가자들의 증언을 통해 21세기를 평화시대로 열어 가자는 의지를 모으는 기획행사
- 2) 때: 1999년 8월 13일 오후 6시 ~ 오후 9시
- 3) 장소: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 야외무대
- 4) 내용
 - 가. 대인지뢰 피해자 등 증언
 - 나. 평화기원메시지발표: 각국참가자 2-3인 정도다. 문화행사와 결합(평화기원 비나리, 노래공연 등)

8월 14일(토요일)

■ 제 2 학술토론회

- 1) 주제: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평화정착의 방향』
 - 2) 때: 1999년 8월 14일 오전 9시 ~ 12시 30분
 - 3) 장소: 프레스덴타 국제회의장
 - 4) 내용
 - 가. 주제 연설 - 한반도 냉전 청산과 NGO의 역할
 - 나. 발제
 - 1분과 주제: 대인지뢰, 아시아 유럽 무기거래와 방위비 주한미군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대안 안보
 - 2분과 주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평화교육의 방향 인도적 대북지원
- 다. 사회: 이삼열(숭실대 교수)

■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워크샵

- 1) 때: 1999년 8월 14일 오후 2시 ~ 오후 5시
- 2) 장소: 타워 호텔
- 3) 주관: ASEM2000 한국민간단체포럼 준비위원회 평화분과
- 4) 내용: 헤이그 대회 평가와 후속 대책 논의, ASEM 2000 평화분과 준비, 기타
- 5) 참석: 해외NGO, 헤이그 대회 참가단체, ASEM 2000 평화분과 단체

8월 16일(월요일)

■ 기자회견 및 공동선언 발표

- 1) 때: 1999년 8월 16일 오전 10시 30분
- 2) 장소: 철학카페 느티나무
- 3) 내용: 기자회견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공동선언

국내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직책
강정구	학술단체협의회	대표(동국대 교수)
김성만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위원장
김용한	우리땅미군기지되찾기전국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윤옥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회장
김창수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정책실장
노정선	연세대	교수
도각	민족화합불교추진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
백승현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이현숙	평화를만드는여성회	공동대표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
이철기	경실련통일협회	정책위원장(동국대교수)
이수형	국제평화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정용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
조성범	남북농발협	사무총장
조재국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집행위원장

해외참가자

이름	소속단체	직책	비고
Brid Brennan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네덜란드
Pietje Vervest	TNI	연구원, 아시아담당	네덜란드
Marco Mezzera	FOCUS	아시아담당 Staff	이탈리아
Martin Broek	ENAAT (AMOK)	연구원	네덜란드
John Feffer	AFSC	아시아 담당	미국
Karin Lee	AFSC	아시아 담당	미국
Roland Wein	Asia House	코레아사회연구소 소장	독일
Gigi Francisco	DAWN	동남아시아지역담당	필리핀
Dorothy Guerrero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국제담당코디네이터	필리핀
Evelyn Ralais-Serrano	Forum Asia	캠페인 컨설턴트	태국